"온라인 등으로 1천여명이 모니터하는 22년 전통의 국감전문 모니터단-한국대학생(법정치)봉사단과 시민·사회단체연대체"

보 도 자 료
국감 중간평가
2020.10.19.(58장)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서울 관악구 쑥고개로 87 반석빌딩 6층 전화. 02) 523-8760~7 (E) goodlaw@goodlaw.org 공동사무국 법률소비자연맹

라임, 옵티머스 등 권력형 금융비리 만연과 사법왜곡 드러나
4·15총선, 선거관리부실은 인정, 선거부정은 부인
탈원전과 태양광사업의 문제점은 여러 상임위에서 지적/공방
-- 국회(21-1)국정감사 전반 성적은 D학점 --

- 국정감사(21-1) 피감기관은 지난해 보다 감소(788개⇒705개), 감사일수도 축소(159일⇒137일)
  - 지난해 기승전 '조국(曺國)국감' 인 반면, 올해 국정감사는 거대 여당의 정부 감싸기 국감
  - 전문성, 투쟁력 없고, 증인, 자료없는 맹탕 국감에, 기업인 민간인 호출 벌세우기 국감은 여전
- 민생·정책은 뒷전이고, 증인채택, 정쟁으로 파행 –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해 "장편소설" 이라며 반발
  - 지난해 조국 가족 펀드, 올핸 투자사기 옵티머스, 라임 정관계 로비 의혹 제기
  - 낙하산, 공직비리, 성범죄 등을 보고도 눈감고 감싸는 여당, 부정부패를 바로잡지 못하는 무능한 야당 / 국정감사현장만 모면하면 된다는 피감기관 / 이를 보고 있는 국민은 허탈·참담
- 코로나19 구실, NGO감시단도 감사위원도 없는 텅빈 국감장, 타의원 질의끼어들기와 막말 등 구태여전
- 비행기 타는 시간이 감사시간보다 많았던 예산낭비 밀실 재외공관 감사는 코로나로 '실효적 화상국감' 됨
- 국회 스스로 만든 법을 자기들이 안지키는 '국감기간' 21대 국회도 여전 / 국감법에 30일을 할 수 있는 국정감사를 20일로 줄여서 하는 것도 모자라 감사준비 휴일, 공휴일 겹쳐 평균10일도 안돼

1. **[평가개요]** 지난 제15대 국회말부터 22년 동안 전국의 국감현장을 밀착모니터·평가해온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를 온라인 등으로 모니터하여(10월 16일(금)까지 종합) 전반 국감을 간이평가합니다. ≪국감정밀 종합평가는 국감종료후 정밀평가과정을 거쳐 12월경 발표예정임≫

2. **[국감성적]** 우리 국감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의 4차년도 국정감사, 1988년 부활한지 33년째 국정감사인 올해 **국정감사 전반을 'D' 학점으로 평가**합니다.

   지난 제20대 국회 첫해 국정감사는 집권여당의 보이콧으로 'F' 학점을 받았고, 지난해 국감은 '기승전 조국' 국감으로 'D' 학점이었는데, 이번 코로나(COVID-19) 국정감사는 지난해보다 파행정도는 양호하였지만, **과반이 넘는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부족과 국정감사 준비부족, 피감기관 업무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다운 국정감사가 아닌 피감기관의 업무보고형식과 국정파악 정도의 요식절차에 불과했다**는 평가입니다.<참조 - 2쪽의 '모니터가 추천한 초선' >

3. **[국감행태]** ①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그동안 정착되었던 '일문일답' 이 많이 사라지고, 자기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정견발표형 국감**으로 퇴보하였으며, 짧은 질의시간에 동영상(뉴스 등)을 보고 질의를 하는 **영상시청형 국감**이 두드러졌습니다. ② 코로나 위기라면서도 705개에 달하는 피감기관을 과다하게 선정했으며, ③ 국감조법으로 정해져 있는 '30일 국감' 을 하지

않고 20일 국감을 고수한채 감사일정은 158일에서 137일로 대폭 축소(위원회별 평균 10일)하였습니다. ④ 국감기간 아닌 때에 할 수 있는 현장시찰과 민간인 증인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여전하고, ⑤ 태부족한 감사시간을 증인채택논란과 여야간의 끼어들기 막말 등 불필요한 정쟁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증인에 대한 성과분석이나 연구자료가 국감부활 33년 동안 하지 않아, 과연 국정감사 기관 선정과 일반인 증인신문제도가 필요한지와 기관증인과의 비중이 어떠한지를 알 수 없음≫

4. **[모니터추천으로 빛난 초선의원]** ≪위원회, 무순, 14인≫ ① **정무위 - 이용우**(민주, 경기고양시정) 전형적인 폰지사기 수법의 옵티머스와 라임에 대한 시정조치의 적시성, 한국판 뉴딜정책에 있어 망분리정책의 핵심과제, 불필요한 규제 폐지와 필요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 구글 등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에 대한 대책마련 등을 질의함.

- 이영(국힘, 비례대표) 160조 예산의 한국판 뉴딜정책의 문제점, 일자리사업의 실효성 확보방안, 연평도 공무원피격 사건해결을 위한 어업지도선 CCTV전수조사 및 설치의 필요성, 스타트업 및 벤처회사를 위한 지주회사 CVC설립의 필요성 등을 질의함.

② **기재위 - 박형수**(국힘,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헌법의 조세법률주의와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소급과세의 문제점, 정치권의 포퓰리즘을 막기 위한 재정준칙의 필요성 등을 질의함.

- 양향자(민주, 광주 서구을) 경제관련 가짜뉴스 대응 미흡, 관세법령 개정안 지연의 문제, 공공기관과 산업계와 함께 대외리스크 점검의 필요성, 일본의 소재산업 수출규제 조치의 전망과 대책, 미국의 화웨이규제와 우리나라 반도체분야 사업의 대책 등을 점검함.

③ **교육위 - 이탄희**(민주, 경기 용인시정) 성비위 교사들에 대한 실질적 징계와 담임 등 보직제한 조치의 필요성 및 징계위원회 학부모대표 참여, 학내폭력사태에 있어 가해자 피해자의 분리, 국공립초등학교와 사립학교의 원격수업참여 격차발생 문제, 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수익의 이자지원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함.

④ **과방위 - 윤영찬**(민주, 경기 성남시중원구) 과기부의 네트워크 편향적 정책방향 지양의 필요성, 5G기술 상용화의 문제, 구글의 인앱결제시스템의 문제와 글로벌독점기업에 대한 대책, 원전 해체산업과 안전을 위한 원안위의 역할 등을 질의함.

- 조명희(국힘, 비례대표) 강원도 산불과 홍수 등 자연재해에 있어 위성 불활용의 문제점, 중국의 심각한 우리나라 방송프로그램 지적재산권 침해문제, 법정제재를 수차례 받은 편파방송에 대한 문제,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 원전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책마련 등을 지적함.

⑤ **외교위 - 조태용**(국힘, 비례대표) 북한대사 입국사실 유출(공개) 등에 대한 외교적 문제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외교부와 통일부내 보안사고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 공공외교를 무력화시키는 정부인사 언행의 문제점, 우리 국민 살해사건의 국제규범 위반의 문제 등 지적함.

⑥ **행안위 - 서범수**(국힘, 울산 울주군)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와 개천절 집회에서 침해의 최소원칙을 위반한 경찰의 과잉대응의 문제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의 현금성 소진 아닌 적절한 사용, 수사권조정에서 경찰수사종결권에 대한 문제점, 공무원 사회에서 예산을 전용한 전별금의 문제 등을 지적함.

⑦ **농림위 - 주철현**(민주, 전남여수시갑) 도서민의 생존권과 이동권을 보장하는 도서여객선의 문제점과 대책, 서해안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한 정확한 조사의 필요성, 실질적인 휴경농지에 대한 대책마련 시급, 김치산업진흥법에 따른 집행기구의 필요성 등을 질의함.

⑧ **산업위 - 신영대**(민주, 전북군산시) 상생법관련 소송에서 정부패소로 만들어진 판례 개정의 필요성, 상생법을 위반하였으나 과태료만 납부하고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외국계 기업에 대한 대책마련, 수소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 신재생에너지 정상추진을 위한 대책 질의함.

- 한무경(국힘, 비례대표) 한전, 배민 등 산업계 독과점 생태계의 문제점과 민간기업의 기술역량 강화의 필요성, 원전사업 축소로 인한 향후 원전연료 수급 대책과 전기료 인상 및 할인제 폐지의 문제점, 해상풍력발전을 위한 초대형 블레이드의 문제점, 중기부주최 브랜드K런칭행사에서 갑자기 변경된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지적함.

⑨ **환노위 - 김웅**(국힘, 서울 송파구갑) 용담다목적댐의 잘못된 운용으로 인한 홍수발생과 댐조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점, 인천지역 수돗물 정수장의 유충발생의 원인, 인천국제공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사업과 특수경비업에 대한 잘못된 직고용으로 발생된 문제점 등을 집중 질의함.

⑩ **국토위 - 김은혜**(국힘, 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세입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전세난 등 정부부동산정책 문제를 조명하고, LH공사의 중복된 연구용역발주의 문제점, LH공사에서 분양전환이윤산정시 감정가 인상의 문제 등을 지적함.

5. [국감성과] ① **법치와 국가정의를 유린**하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국민에게 알리게 되었고, ② 4·15 총선 당시 선거관리 부실 의혹과 관련 **한병도 의원**(민주)과 **최춘식 의원**(국힘) 등의 질의에 선관위 사무총장의 사실인정(중국인 개표사무원 위촉, 간식박스사용 등)과 CCTV없는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확인, 경찰호송 없는 투표함 이송 등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며, ③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 태양광사업의 현실과 난맥상을 바로 알 수 있는 국감이 되었습니다. ④ 매년 장시간 비행기 타고 다니며 엄청난 예산을 사용한 해외 유람식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가 코로나19 덕분으로 화상 국정감사로 대체되었고, 라임사태의 주요 피의자가 인터폴의 적색수배자가 되었음에도 재외공관의 방임으로 활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인터넷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였습니다.

6. [국감개선] 국회의원(감사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해도 시정/개선하지 않고 피감기관장은 "예, 알겠습니다" 만 하고, 올해에도 시정조치관련 보고가 되었는지를 감사장에서 묻는 등 **국회는 시정조치의 여부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올해도 맹탕 국감**, '그나물에 그밥' '붕어빵' 국감이 되고 있어 2차년도부터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합니다.(시정조치는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명기하여야 할 것)

7. [국감당부] 김대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공동단장은 "권력은 집중(분권-Balance)되거나 통제(감사-Check)가 없으면 반드시 부패한다.(Acton)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모든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의 의미는 막중하다. 그러므로 **여당이라 해도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권력(정부)을 제대로 감사해야(국회법 제114의2)하고, **야당은 여당보다 더 엄중한 책임감과 전문성**으로 무장해 **사전 준비와 철저한 현장점검을 거쳐 충실국감**을 해야 할 것임에도, 이번 국감은 **여당은 감싸기, 야당은 준비부족이 많이 드러나는 부실국감**이었다." 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담당 : **홍 금 애** 집행위원장, **윤 소 라** 사무국장≫ goodlaw@goodlaw.org / www.GoodLaw.org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2020년도 국정감사 전반전 모니터링 개괄보고서

≪ 목 차 ≫

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전에 대한 간이총평** ····· 5
1.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전의 성적은 D학점 ····· 5
2. 전반에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약평 ≪상임위 무순≫ ····· 11
3.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여전 ····· 17
4.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 18
5. 국회사무처의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은 옳은가 ····· 19

Ⅱ. **2020년도 국정감사 전반전의 진행상 특징** ····· 20
1. 2020년 국정감사 전반전의 행태적 특징 ····· 20
(1)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부실국감 ····· 20
(2) '한마디' 말 못하는 들러리 기관 ····· 22
(3) 심야국감은 겨우 5번, 열의를 가진 국감진행 안돼 ····· 24
(4) 조기 종료 국감은 줄어 ····· 24
(5)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코로나가 막아 ····· 25
(6) 파행성 정회는 줄어 듬 — 싸우면서 그냥 진행 ····· 25
(7) 국정감사 불출석 의원은 대폭 줄어 ····· 26
2.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도 여전함 ····· 26
(1) 지역구 관련 질의 ····· 26
(2) 피감기관 제출자료로 시간 때우기 (노력한 결과물이 없음) ····· 26
(3)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버티기 ····· 27
(4) 역대급 자리 안지키기 ····· 27
3.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활동 소개는 미흡 ····· 27

Ⅲ. **2020년도 국정감사 전반전의 화제성(話題性)자료**(언론, 모니터보고 종합) ····· 29
1.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인 장관의 답변방법** ····· 29
(1) 이인영 통일부장관 "개인사정" ····· 29
(2)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보없다" ····· 30
(3)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동의하지 않지만 국민걱정 죄송' ····· 30
(4)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불가피한 선택" ····· 31
(5)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판넬답변" ····· 31
(6) 추미애 법무부장관 "27번 윽박" ····· 32
2. **관심을 끈 국정감사장**의 **'사과'** ····· 33
(1) 강경화 외무부장관의 '남편사과' ····· 33
(2)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백신사과' ····· 33

(3)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5·18 사과' ····· 34
(4)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건배사 사과' ····· 34
(5)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옵티머스 사과' ····· 34
(6) 김종석 기상청장의 '기상오보 사과' ····· 35
3. **열전 또는 파행을 야기한 의원의 '한마디'** ····· 35
(1) 고민정 의원의 '빨간 안경' ····· 35
(2) 윤건영 의원의 '고장난 레코드' ····· 37
(3) 장제원 의원의 '김남국 위원' ····· 38
(4) 안병길 의원의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 38
(5) 박대출 의원의 '네이버 국회농단' ····· 39
4. **이번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 소품 일부 사례** ····· 40
(1) 방역지침에 의한 국정감사장 칸막이벽 ····· 40
(2) 송석준 의원의 나훈아 '테스형' ····· 40
(3) 윤재갑 의원의 중국산 민어 ····· 40
(4) 문진석 의원의 판스프링 ····· 41
(5) 김형동 의원의 소방헬기 ····· 41
(6) 류호정 의원의 배선 노동자 복장 착용 ····· 41

Ⅳ. **매일매일 깜짝 놀란 통계 및 자료 편린** ····· 41
1. 2020년 10월 7일(수) ····· 42
2. 2020년 10월 8일(목) ····· 44
3. 2020년 10월12일(월) ····· 46
4. 2020년 10월 13일(화) ····· 48
5. 2020년 10월 14일(수) ····· 50
6. 2020년 10월 15일(목) ····· 52
7. 2020년 10월 16일(금) ····· 55
참고 : 자료 21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 58

Ⅰ. 제21대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전 간이총평

1.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전반전의 성적은 D학점

우리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의 전반전 성적을 지난해와 같이 'D' 학점으로 평가한다.

(1)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국정감사의 권능으로 인해 주권자인 국민들은 대표자들인 국회의원을 통해 우리 정부가 얼마나 건전하게 운영되는지 한 눈에 파악

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민주적 기본적 질서를 지키고, 영토를 보위하며 국리민생을 위해 노력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문재인 정부 4년을 총 점검하는 중요한 국정감사이고,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라는 비중이 큼에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ABC국감으로 진행되고 있다.

① A - 초보자가 전문가를 감사하는 **아마추어 국감**

먼저, 4·15 총선의 새바람 열풍으로 제20대 국회보다 초선의원이 많아 151명에 달하고 있으며, 선거임박 선거법 개정으로 비례위성정당이 생기는 바람에 총선에서 전문성보다는 대중 인지도와 감성을 중시해 충분한 전문성을 갖춘 인사 보충이 힘들었던 측면이 있었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초선의원들을 위한 집합 워크숍 등도 개최하지 못하였고, 유례없는 비상시국에서 개최된 위기국감이었음에도, 위원들의 준비부족(?)으로 대정부견제를 하는 데에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감사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 되었다.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의원 질의의 특징**≫

▣ **국정탐색형 국감**

피감기관의 업무를 제대로 숙지하여 못하여 국정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탐색하는 듯이 피감기관에 대해 질의를 하다가 피감기관이 반대하거나 부인을 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라고 하며 질의를 맺음.

* 감사위원 질의예 : "종합적으로 파악해 주셔서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으로 의원실에 제출해 주세요"
* 피감기관 답변예 : "지금 답변은 하나하나 드리지 않고 저희가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먼저 보시고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견발표형 국감**

감사위원이 뭔가 제도나 정책에 대한 의견말씀을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피감기관이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문일답이 원칙인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진 감사였음.

* 감사위원 질의 :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에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OO지원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게 사업에 대한 지적이 아니라 정책에 대한 토론이다 보니까 장관님께 중간중간 질문을 드리기보다는 쭉 제 설명과 지적을 들어보시고 끝낼 무렵에 충분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 피감기관 답변예 : 예 동의합니다.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 **영상시청형 국감**

국정감사질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2분정도 영상을 보고 관련 질의를 하는 국정감사 형태

* 감사장에서 주로 들리는 내용 : "영상 하나 봐 주세요" "영상 틀어 주세요" "뉴스 보도 영상입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는데" "영상 하나 보시죠." "영상 보셨어요" "소감이 어때요" "왜냐하면 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보시고. 지난해 2월에 주민 제보로 방송된 내용이거든요." "동영상 한번 봐주세요"

② B - 집권여당의 정책국감을 표방한 **방탄국감**

174석의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이 국정감사를 정부견제 보다는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되는 것은 국감계획단계부터 자르고, 주요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도 국민을 피로케 하는 '맹

탕’ 국감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의 사회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원장이 모두 여당인 관계로 국정감사 진행에 있어 정부견제라는 야성을 찾기 어렵고, 적당히 균형을 맞추어서 넘어가려고 하고 있다.

≪국감시작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각오≫

○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 “이번 국감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며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의 정쟁과 꼼수에는 원칙과 상식으로 대응하고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에는 팩트 체크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일하는 국회의 진일보한 국감이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날 국감 사전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 20일은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의원들을 향해 “국정 난맥상과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적나라하게 알려 달라”고 주문했다. (출처 : 세계일보, 2020. 10. 6. A4면)

③ C - 1급 전염병인 국정감사 사상 초유의 **코로나 위기** 국감

코로나19 여파로 국감 회의장에는 2인 1개로 사용하던 마이크가 1인 1개로 배치됐으며 좌석마다 비말 투명 칸막이가 설치됐고, 집합 인원 50명 제한 권고에 따라 국감장 참석 인원을 줄이고 비대면 영상 국감을 시행하기도 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마스크 착용, 칸막이 설치로 국정감사의 팀워크를 기대하기 어렵고, ‘흩어져야 한다’는 코로나19의 행동지침처럼 의원간 합동으로 집중적인 송곳질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전반전 실망 ① 국감직전 북한군이 서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을 총격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고, 합동참모본부가 북한군이 사체를 소각하였다는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보도를 통해 접하여 충격을 받았는데, 국정감사 중 이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지 않고 지지부진하여 실망을 거듭하고 있다.

② 법 집행을 총괄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인사청문회부터 불거져 나왔던 아들 군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렸는데, 검찰의 조사발표에 추미애 장관이 그동안 대정부질문 등에서 거짓말을 한 의혹이 있다는 야당의 지적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건 관련 증인을 신청하였으나, 여당이 반대하였고, 이 문제로 국정감사장마다 증인채택 논란과 여야 간의 감정대립으로 파행을 빚는 등 아쉬움을 자아냈다.

③ 지난해에는 조국 수호 쪽에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규탄하면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초대형 장외집회(서초동집회)가 열렸고, 조국 파면 쪽에선 현 정

부의 독선적 정국운영과 실정을 규탄하는 초대형 장외집회(광화문집회)를 개최하였고, 이러한 정반대내용의 집회는 조국 전 장관의 사퇴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올해에는 10월 3일 개천절 경찰의 광화문 원천봉쇄(소위 '재인산성' 쌓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크게 갈라진 모습을 보였다.

(3) 후반전 기대 ① 이번 국정감사에서 라임 · 옵티머스 사태가 국감장에서 쟁점화 되었다. 라임과 옵티머스 두 펀드의 피해금액은 2조원에 넘는다고 한다. 투자자들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질 일인데,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해외도피까지 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이들의 범행을 도운 뒷배가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모조리 찾아내 단죄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 국가정의가 살아 있음을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 주어야 한다.

참고(정국 뇌관 '라임·옵티머스'②] 예견된 사고…서로 닮은 두 펀드, 데일리안, 2020. 10.15)	
'라임 사태'란 라임자산운용의 펀드가 부실 운용되다가 지난해 10월 환매중단이 되면서 1조원 이상의 피해가 난 사건이다. 청와대 및 집권여당 관계자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다. 사태의 중심 인물인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검거되는 과정에서 현금 55억 원이 발견돼 압수됐다. 이들은 55억 원을 5만 원권 지폐로 해외여행용 대형 캐리어 세 개에 나눠 담아 보관했다. ≪의혹/쟁점≫ '라임사태' 조단위 피해에 靑·與 관계자 연루 현금 55억원 캐리어로 옮기다 허리 다칠 정도 靑전 행정관과 민주당 이상호 위원장 구속돼 강기정·기동민·김영춘 등은 의혹 전면적 부인	**'옵티머스 사태'**란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겠다며 1조2000억 원대의 시중자금을 끌어 모은 뒤, 부실운용을 하다가 올해 6월 환매중단된 사태다. 라임 사태에 뒤이은 사모펀드 사기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김재현 대표는 펀드를 부실 운용하는 한편 자신의 증권 계좌를 통해 수백억 원을 횡령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 돈이 정·관계에 로비 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라임 사태'와 빼다박은 양상이다. ≪의혹/쟁점≫ '옵티머스 사태'도 정계 '로비 자금' 조성 의혹 자산운용사 대표, 수백억 원 횡령 정황 포착돼 이낙연, 복합기 대여사용료 대납 의혹에 직면 이재명, 자문단 고문과 회동 사실 '메모' 거명

② 4·15 총선 관련 선거관리 부실,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논란이 거듭되고, 유투브에서는 이같은 내용이 크게 회자되고 장외집회까지 열리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쉽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선수들인 국회의원들은 선거법을 위반해 무려 27명이 10월 15일 시효만료일까지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데, 감독 · 심판격인 중앙선관위는 밝혀진 업무부실과 해태에도 불과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는 듯이 답변하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특히 우리나라 개표기를 사용한 키르기스스탄 총선 부정으로 인해 대통령이 사임하는 등 주변국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는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선거부정은 근거 없는 주장이다'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선거과정을 하나씩 정밀점검해서 부실을 살피고, 내년 보궐선거 등에서는 개선된 선거룰과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행정안전위원회의 10월 12일 오후 중앙선관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질의에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중국 국적의 개표사무원을 위촉하였고, 간식박스를 투표용지보관함으로 사용하였음에도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 듯이 "적절하지는 않았지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규정에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하는가 하면, 국민의 힘 **최춘식** 의원의 질의로 **"CCTV가 없는 사무국장실**에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 "경찰호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사실로 밝혀짐.

≪속기록≫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질의 : 한 번 확인만 해봤으면 좋겠다. **주로 주장하는 것이,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했다는 말이 됩니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그거는 서울시내 구위원회 한 군데에서 개표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느 단체가 있었습니다. 단체분들을 여러, 대여섯 명을 모셨는데 **그 분 중의 한 분이 국적이 중국으로 되어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 이것 때문에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개표소에서 투표지를 빵상자에 보관했다는 것은 뭡니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그거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그 사전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비례용지가 길다보니까 해당구위원회에서 투표용지보관상자 수요를 잘못 예측해서 넣다보니까 부족하다보니까 간식 먹었던 상자를 가지고 활용한 것인데요, 그건 뭐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법규위반되는 것은 아니지만, 뭐 적절하지는 않았습니다.**

○ **최춘식 의원 질의** : 지금 관외사전투표의 보관장소가 저희들이 집계를 낸 바에 의하면 **사무국장이나 과장사무실에 보관한 곳이 한 250군데 되고**, 그 다음에 회의실이 2곳, 조사실이 1곳, 문서고가 2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원칙을 세울 수 없습니까?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각 청사마다, 구시군 청사마다 제각각이어서 그게 여러운 점이 있는데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접수되면 투입할 때에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추천위원 참관 하에 또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보통이 대다수가 사무국장실을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춘식 의원 질의 : **사무국장실에 하다 보니까, 여기에 CCTV설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답변 : **예.**

최춘식 의원 질의 : 우편물에 대한 문제점이, 우편투표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 경찰관이 호송을 하는 게 원칙이죠?

최춘식 의원 질의 : **호송요청을 했던 실적을 보면 12.5%정도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호송이 이루어진 비율은 9.8%밖에 안됩니다.**

③ 이번 여름 태풍피해와 관련해 그 피해의 원인 중 하나로 알려진 태양광사업 등에 대해 제대로 감사하여 태양광사업 관련 부정이나 비리가 있다면 반드시 찾

아서 발본색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농지 잠식 및 국민연금을 위협하는 태양광 사업 열풍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재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 10월 7일 행정안전위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는 **한정애** 의원은 태풍피해와 관련해서 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지금 태양광 시설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 다만 언제 설치됐는지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히는 게 맞다"고 하면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설 허가가 나왔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전력공사에서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징계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9월 28일 한국전력공사가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태양광 사업 관련 직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은 총 91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단 2명이었던 징계 직원은 문재인 정부가 본격적으로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지난 2017년부터 2020년1월까지 총 91명이 징계를 받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10월 16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금품 및 향응수수 해임자 퇴직금 정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26명이 해임됐으며 이들에게 모두 35억원의 퇴직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강릉)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신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 **3년간 여의도 면적 27배에 달하는 태양광**이 설치됐다"며 "농지를 잠식하면서 태영광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농촌 태양광 사업은 농촌(일반) 태양광과 영농형 태영광으로 구분된다. 농촌 태양광은 농지 자체를 태양광 발전시설로 바꾸는 것이며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 위에 구조물을 세워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시설이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부터 제출받은 '국민연금 코퍼레이션 파트터쉽 펀드(코파펀드) 투자현황' 에 따르면, 매몰비용을 포함해 254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전력의 미국 태양광사업에 2,367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한국전력과 2013년에 각각 4,000억원씩 총 8,000억원을 출자해 해외발전소 및 연료 사업에 투자할 코파펀드를 조성했고, 국민연금은 현재까지 이 펀드에 2,367억을 투자하고 있다.

④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의 앙등으로 전세난민 등 피해가 극대화되고 있으므로 국정감사를 통해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⑤ 코로나19 방역의 허점이 없는지 제대로 살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형식적 특징 이번 국정감사는 ① 한글날 등 법정공휴일, 준비휴일을 제외한 10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전체 705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수박 겉핥기식 국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고, ② 예전보다 밤 11시가 넘는 심야 국감은 줄어들고 있어 국정감사에 대한 열의가 없어 보였으며, ③ 더욱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감사위원간의 감정대립, 감사위원간의 끼워들기와 막말은 국정감사의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

④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문제도 심각한 현상 중의 하나인데, 이번 국정감사에선 엉뚱하게 의원들끼리 자료제출관련 논란이 벌어져 소중한 국정감사 시간을 허비하였다.

[의원끼리 고성이 오간 사례]

○ 10월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강섭 법제처장의 부동산 자산 의혹 관련 자료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는데,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갑을논박하였다. 송기헌 의원은 "그동안 자료 제출 의견은 자유롭게 이뤄졌으나 감사와 관련 없는 내용은 감사 사안이 아니다" 라며 "법에 되어 있는 대로 해야 한다는 김진애 의원의 지적이 정당하다"고 말했다.

○ 여야의 싸움에 더하여 피감기관도 예년과 달리 팔장을 끼고 답변을 하다가 지적을 당하기도 하였고, 피감기관장의 답변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입장차가 있어 의원들끼리 논란이 벌어져서 고성이 오가기도 하였다. 권인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13일 국회 교육위에서 열린 교육부 소관 기관 국정감사에서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을 상대로 성희롱 피해자가 오히려 피해를 보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는데, 안병욱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반박하는 답변을 하자,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답변태도를 문제삼았으나,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을 압박하지 말라" 는 취지로 말을 하여 충돌하기도 하였다.

⑤ 외교통일위의 민주평통 국정감사에서는 어처구니없게 집권여당 여성중진의원에게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불법음란물 리트스' 가 나와 공직기강해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기도 하였다.

▣ 기타 국감 초반 자료제출관련 문제가 된 곳

○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양형위원회 등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이 국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대법원에 대해 "피감기관이 입법 기관을 우습게 안다"고 성토하였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감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체부에서 국감 이틀 전 USB(이동식 저장 장치)를 저희 방 입구 책상에 던져주고 갔다"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하였다.

2. 전반전에 눈에 띈 국정감사 쟁점과 상임위 국감 약평 ≪상임위 무순≫

지난해 국감에서는 조국 법무부장관 의혹과 관련된 질의가 교육위, 법사위,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등에서 크게 다뤄졌다. 올해에는 여러 위원회에서 2주차 초반부터 라임·옵티머스사태가 크게 이슈화되고 있다.

≪라임 및 옵티머스사태가 등장한 국정감사장 일부≫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 내용
법 제 사 법	12일 법무부	옵티머스 의혹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한다.

위원회	대상기관	질의 내용
정무	12일 금융감독위	옵티머스와 라임 특혜 의혹
	13일 금융감독원	은행권 등 압력행사 여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2일 한국농어촌공사	공사가 옵티머스자산운용관련 펀드에 사내근로복지기금 30억원을 투자해 손실점검
행정안전	12일 중앙선관위	옵티머스의 선거후보자에 대한 편의제공 의혹과 선거법위반 수사 여부
과학기술방송통신	15일 한국방송공사	2017년 옵티머스 펀드에 670억원의 기금을 투자해 몰매를 맞고 있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의 전임 원장과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5일 한전 등	남동발전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6일 농협중앙회	옵티머스 펀드 전체 피해액(5151억원)의 84%를 판매한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의 절차상 하자와 투자자 보호 대책 마련

(1)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이번 국정감사 전체를 국회에서 진행하는 초유의 모습을 보여 주어 호평을 받았으나, '추미애' 국감이라고 할 정도로 첫날부터 추미애 법무부장관 관련 증인 신청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법무부 국정감사는 일부 파행되기도 하였다. 국감장마다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헌법재판소 개혁, 감사원 개혁 등 개혁의 목소리는 나왔지만 개혁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는지 알기 어려웠다.

(2)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서해상 우리 공무원 피살사건 증인문제로 국감계획서 채택부터 파행을 빚었으나, 국정감사는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국방위원회가 결의문채택 등 감사직전 벌어진 서해상 공무원 총격 피살과 관련하여 강한 분노감을 표출했었으나, 정작 국정감사장에서는 정보유출 문제, 월북여부 등이 더 많이 다루어졌고, 이 사건에 대한 지칭도 여야 간의 온도차가 있었다. 병무청 국정감사에서는 BTS 병역관련 화제가 집중되기도 하였으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남영신 총장이 '5·18 사과'를 하여 주목받기도 하였다.

≪ '대한민국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한 북한의 총격 등 무력도발행위'에 대한 표현≫

(9.24. 국방위 전체회의 규탄결의안 제목)

성명	직책	최초언급시	언급시 사건 표현 등
서 욱	국방부장관	인사말	최근 발생한 서해상 우리 국민 사망사건
한연수	국방부기획조정실장	업무보고	서해상의 우리 국민 사망사건
이채익	위원(국민의힘)	의사진행발언	공무원 피살 사건
김병기	위원님	주질의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김병주	김병주(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이번에 일어나서는 안 될 또 너무나 불행한 서해에서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성명	직책	최초언급시	언급시 사건 표현 등
강대식	의원(국민의 힘)	주질의	피격된 A씨
김진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관련 질의 안함
신원식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우리 국민 피살 사건
박성준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
윤주경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이번에 해수부 공무원을 피격한 이것
설 훈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언급 없음
하태경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신원식 위원 질의하신 거
홍영표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이번에 어업지도원 실종 사건 그리고 비극적인 그런 사망 사건
황 희	위원님(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질의는 했지만 명시적으로 표현안함
김민기	위원(더불어민주당)	주질의	서해 우리 국민 피격사건
홍준표	위원(무소속)	주질의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피격당하고 소각당하는 사태 (두번째는 피격 소각 사건)
한기호	위원(국민의 힘)	주질의	이번 만행
민홍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감사종료시 요약정리	공무원 피격사건

통계 자료 출처 : 2020. 10. 7. 수.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부 국정감사(국회방송 생중계)

(3)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발언과 강경화 외무부장관 남편의 해외여행, 북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대사 입국 사실 공개 논란, 서해상 우리 국민 피격사건시 외무부 장관 NSC회의 패싱사건 등이 집중 조명되었다.

1995년 재외 공관 국정감사 이후 첫 국내에서 외교공관에 대한 화상 국정감사를 전개하였다. 실시간으로 화상국감의 내용이 전해져 재외공관 국정감사의 내용이 업무보고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10월 14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재외공관이 라임 사기펀드 주요 피의자가 적색 수배자가 되어 있음에도 검거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다는 질타가 실시간으로 전해지기도 하였다.

(4)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윤후덕**)는 코로나19 추경의 실효성, 소득주도성장 등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찬반입장이 쟁점이었다. 10월 5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고, 기획재정부 2일차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주식보유액 3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간주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일제히 비판하기도 했다. 5년간 160조원이 투자되는 뉴딜정책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법인세 논쟁, 세금 탈루, 짝퉁 유입문제, 통계문제 등 지난해 있었던 질의들은 반복되었다.

(5)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실시한 국

정감사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치열한 공방이 빚어졌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여권 인사 연루설이 제기되고 있는 옵티머스 사태를 집중 추궁했고, 금융위는 이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폐지하는 과정에서 금융위가 반대 의견을 내지 않은 점, 공매도 제도 방향,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필요성 등을 집중 추궁했다. 공정거래위, 소비자원 등 국정감사에서는 구글 30% 통행세 조치 주문, 뉴스 조작 의혹 등이 쟁점이 되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쇼핑·동영상 부문에서 검색 알고리즘을 자사에 유리하게 바꿨다가 적발된 네이버의 행위와 관련해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6)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그동안 여야간 정쟁이 많지 않았던 위원회였으나, 국감 첫날부터 文대통령 농지법위반과 관련하여 "투기 아닌데..야멸찬 국감"이라는 논란이 있었고,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유가족의 증인채택, 해양경찰청장의 위증문제, 옵티머스 펀드 투자경위 등 관련 여야간 뜨거운 논란이 계속 되었다. 둘째날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국감계획을 바꿔 해양경찰청 국정감사까지 동시에 하였으나, 해양경찰청장의 답변 회피로 인해 서해상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과 월북여부가 나온 경위 등에 대한 진상파악을 하지 못하였다. 다른 상임위 국정감사보다 일찍 마무리되었고, 다른 국감의 내용은 지난해와 비슷하였다. 해양수산산업의 발전과 소관 기관의 낙하산 인사, 특혜 지원의혹, 모럴 해저드 등이 조명되었다.

(7)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교육의 좌편향성 문제가 쟁점이 되었다. 민주화운동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수업으로 인한 학력격차 문제 등이 쟁점이었다. 첫날 교육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고 물은 것이 사상검증 논란으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교육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1주차 1번, 2주차 2번 총 3번 국정감사를 하였다. 15일에는 서울, 경기,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원격수업과 돌봄관련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감사관 자녀 시민감사관 위촉 논란과 제주도연수원 건립 문제 등이 문제되었다. ≪11년 연속 파행을 기록한 문제의 상임위였으나,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는 아직 파행 없었음≫

(8)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는 10월 14일 국감휴무일에 국

민의힘 의원들이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관련 네이버 항의방문을 하는 등 '네이버 이슈'가 불거져 나왔으며, 탈원전 대책, 미래 먹거리대책, 원자력 안전, 가짜뉴스 근절책, 연구기관의 모럴해저드 등이 조명되었다.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화상국감을 진행하였는데, 피감기관장이 움직이지 않아 화면정지 소동이 벌어지는 등 해프닝이 발생하기도 했다. 위원장이 종이 없는 국정감사를 추진하였고, KBS 국정감사에선 화제의 나훈아 콘서트도 등장하였으며, KBS의 검언유착 오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일시적인 파행성 정회도 있었다.

(9)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는 전반전에 현장시찰 1회를 하였고, BTS 병역특례 등이 조명되었다. 다른 상임위보다 비교적 조용한 가운데, 코로나19 문화체육계 피해(약 11조원 추정)대책, 고궁 문화재 보호, 문화체육정책, 코로나사태 속 관광위기 극복정책에 대해 조명하였다. 야당의원들은 위원장의 질의시간 배분과 관련해 의사진행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10)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첫날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경찰의 개천절 광화문 봉쇄조치에 대한 찬반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차벽 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과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을 조명하였고, 4·15총선거 관련 재개표문제 점검, 수사권 조정관련 경찰개혁, 선거제도관련 문제가 쟁점이었고, 고층 빌딩 화재와 관련하여 소방문제가 점검되기도 하였다. 최초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국정감사를 외부에서 할 계획이었으나, 대폭 수정하여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모두 국회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4·15 총선 선거관리 부실문제가 집중 제기되었고, 야당에서 선거부정 의혹까지 제기하며 빠른 재검표를 요구하자 선관위측에서도 '대법원의 재검표 결정이 빨리 돼, 의혹이 해소되길 학수고대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관련 서울시 대처 문제가 질의되었고, 서초구의 재산세 인하방침에 대한 서울시의 태도도 쟁점이 되었다. 지난해와 같이 여야간 막말소동 등의 파행은 없었다.

(11)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진선미**)는 첫날부터 김현미 장관의 조문외교로 인하여 국정감사가 미뤄졌다. 도로공사 국정감사, 토지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럴해저드가 부각되었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문제도 크게 조명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이

질의에 앞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되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해수부 공무원을 추모하는 추모곡을 틀어 화제가 되기도 한 가운데,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최근 집값 급등과 전세난 등 부동산 문제들이 문재인 정부 책임인지 박근혜 정부의 책임인지를 두고 고성이 오갔다.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 요금소 요금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10월 16일에도 나훈아의 '테스형' 이 나왔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부동산 정책으로 국민이 힘들다" 고 질타하는 과정에서 김현미 장관도 갑작스런 테스형 상영에 웃을 터트리기도 하였다. 김현미 장관에게는 전세를 포함한 부동산가격 앙등에 대한 국민적 피해와 관련하여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례가 질의되기도 하였다.

(12)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민석**)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두고 여야가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야당이 K방역이 성공했다고 볼 수 없고, 정부가 유독 집회에만 방역을 위해 과잉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여당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한다며 맞서기도 했다. 코로나19 관련 백신개발, 독감백신 유통과정 문제, 국민연금 개혁, 문케어 등의 정책국감을 5일 동안 실시하였다. 서울대병원장 등 대학병원장들이 10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의대생들의 국가고시 미응시 문제' 관련 사과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의대생들의 재응시 기회 부여에 대한 논란도 계속되었다.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된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는 '상온노출' 사태에 이어 '백색 입자' 사태까지 더해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품질 관리를 놓고 질타가 이어졌다. 의약품의 안전성, 유효성, 임상시험 등을 심사해 인허가 서류를 검토하는 공모직 직원들이 정보 유출 및 금융 투자 조사 등 이익충돌에 취약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13)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송옥주**)는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미세 플라스틱 공포가 만연되어 있는 가운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장관의 왼손선서만 화제가 되어 아쉬웠다. 고용노동부 국감은 세종시에서 진행하였는데, 이스타항공의 대량 해고사태 책임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들의 잘못된 직접고용 문제에 대한 질타가 있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국공 사태와 관련한 '청와대 개입설' 을 제기하기도 했다. 올해에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여름기상 예측이 실패한 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 비가 온다는 농담 섞인 발언부터 기상청장은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날 선 지적까지 있었다.

(14)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에서는 160조원이 투입된 '한국판 뉴딜'과 함께 태양광·원자력발전(탈원전)을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이 이어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는 중소상공인 살리기 정책에 대해 조명을 하였고, 여당의 고민정 의원이 야당의 한무경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빨간색 안경론'을 제기해 파행성 정회를 하기도 하였다.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 삼성전자의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의혹, 브랜드K 론칭 행사 수의계약 의혹, 중소벤처기업부의 이벤트 행사와 TV 광고 문제, 배달의민족(배민)과 딜리버리히어로(DH)의 배달앱 서비스 '배달통'의 시장 점유율 조작의혹, 중형슈퍼마켓인 '식자재마트'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었다.

3. 마구잡이 피감기관 선정, 전문성 부족 및 형식적 국감 여전

초선이 151명이나 되는 제21대 국회는 무려 705개(지난해 78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피감기관을 압도하는 전문성 있는 질의보다는 나열식 질의를 하고 있다. 상대방 의원에 대한 질의도중 끼어들기 등의 구태가 답습되기도 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김남국 의원이 전주혜 의원의 질의에 끼어들기를 하여 결국 여 야당 고성으로 위원장이 '장마당이 아니지 않으냐'며 정회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다만 지난해와 같이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감사위원간의 막말로 인해 윤리위 제소까지는 가지 않고 있다.(지난해 10월 8일 민주당 의원 20명이 여상규 법사위원장을 윤리위 징계안 제출)

초선의원들의 업무미숙으로 인해 피감기관의 '이순간만 지나면 된다'는 식의 뻔뻔스런 답변에도 의원들이 재반박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자주 나타났고, 이에 모니터위원들은 '국회가 농락당하고 있는 듯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정부가 국정감사를 통해 1년에 한 번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로부터 '질타', '호통'을 듣고, 예산 낭비 및 부실한 정책집행에 대해 점검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본다.

그럼에도 시정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년 같은 질의가 반복되는 '붕어빵' 국정감사가 되고 있는 것은 **피감기관이 국정감사기간만 지나면 된다고 생각하여 안이하게 답변하였고**, 국회의원들도 질의만 하고 후속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아왔

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제도적으로 시정조치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실명제(질의한 의원표기) 및 위원회별로 평가팀을 만들고**, 국정감사 전에 **시정처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점검**하도록 하여 매년 반복질의 되는 일이 없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감사 중 질타를 통해 허위 시정처리보고를 발본색원을 하는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질의한 의원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보니, 정부의 시정조치 보고에 대해 질의한 의원도 관심이 없고, 질의하지 않은 의원은 더욱 관심이 없으며, 상임위에는 담당하는 사람도 없다보니, 시정조치 허위보고가 무책임하게 다음 해에 다시 질의되는 현상이 없어지지 않고 있다. 국감이 부정부패 면죄부가 되는 오·남용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정조치 내지 예산낭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내년 555.8조원 (2020년 본예산 대비 8.5%증가, +43.5조원)예산안에 대한 국회 예산심사와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증인채택 문제 등으로 인해 의사진행 발언만 풍성

국방위원회(위원장 민홍철)는 10월 6일 첫날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파행을 빚어 여야간 의사진행만 계속 이어지다가 겨우 진정한 후에 본 질의를 할 수 있어 다행이라는 자괴감 섞인 말이 나오기도 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첫날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오전에 의사진행 발언이 이어졌고,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윤호중)는 첫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 문제로 의사진행발언이 계속 되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첫날 증인채택 회의 관계로 국정감사가 조금 지연된 후 시작되기도 하였고,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에서도 네이버 관련 증인채택이 논란이 되었다.

▣ 증인 채택 불발 사례

○ 국방위 :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아들 관련 10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이 모두 거부하면서 채택에 실패하였다.

○ 법사위 : 추미애 장관 아들 등 증인으로 거론됐지만 민주당 반대로 무산되었다.

○ 외교통일위원회 : 서해상에서 북한의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씨가 국감 증인을 자청했으나, 민주당은 이씨가 국방위나 농해수위에서 증언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입장으로 거부되었다.

○ 과방위 : 네이버 검색 알고리즘 조작 의혹 관련 증인 신청을 한 바 있으나 불발되었다.

▣ 증인과 참고인 인사들의 불출석(사유서 제출) 사례

○ 보건복지위 : 추 장관 아들의 무릎 수술을 집도한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교수 A씨

○ 과기정통위 : 구글코리아의 낸시 메이블 워커 대표, 참고인으로 채택됐던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인기 캐릭터 펭수 측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계관의 일관성과 신비감이 지켜져야 한다"며 불출석통보

○ 환경노동위 : 증인으로 채택된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도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 정무위 : 서경배 아모레 퍼시픽 회장은 코로나 19 의심증상으로 불출석 통보

5. 국회사무처의 코로나 방역 가이드라인은 옳은가

국회사무처에서 이번 국정감사 관련 방역 지침으로 50·50·50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각 상임위원회로 내려 보냈다.

10월 7일 국방위원회의 민홍철 위원장은 국회사무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국정감사의 기관증인들을 다른 장소에 분리 대기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10월 8일 첫 국정감사를 하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진선미 위원장은 "국감장 내에는 기관장 4명과 증인 이외 출입을 금한다" 며 "또한 10명 내외의 의원들만 순서대로 질의에 참석하고, 그 외 인원은 국감장 근처 행정실로 이석해 달라" 고 말하기도 했다.

피감기관은 책임자가 답변을 하면 되지만, 감사위원들이 감사장을 이탈하여 자리를 뜨는 것은 옳지 않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각 시·도와 경찰청 국정감사를 지역 현지가 아닌 국회에서 한꺼번에 하기로 해 국감의 현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은 국감장 마련과 의전, 방역 등 국감 준비 시름을 크게 덜게 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라는 인터넷 기사가 뜨기도 하였다.

국정감사에 임박해 코로나 방역지침이 내려졌는데, 이러한 방역지침으로 코로나19가 예방될 수 있는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위기나 재난시 국정감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매뉴얼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 거기에는 합리적으로 기관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도 마련해 놓아 지금처럼 백화점식 감사보다는 선택과 집중의 국정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

Ⅱ. 2020년도 국정감사 진행상 특징

1. 2020년 국정감사의 행태적 특징

(1) 10개 이상 동시 수감기관, 부실국감

2020년도 감사에서는 위원회별 하루에 감사하는 피감기관수가 평균 5.5개였다.

하루 평균 피감기관 수가 가장 많은 위원회는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하루 평균 9.1개였으며, 지난해 가장 많았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하루 평균 8개 기관을 감사하였다. 다음으로 **국방위원회**는 7. 9개 기관, 국회로 장소를 옮긴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보다 많은 6.9개(2019년도 6.2개) 기관이었다.

하루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가 이루어진 일수는 무려 **21**회(2019년도 30회)나 되어, '흩어져야 산다' 코로나19 방역지침을 무색케 하였다. 10개 이상 피감기관에 대한 동시감사 일수를 살펴보면, **환경노동위원회**가 5일,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국방위원회**가 3일 순이었다.

10월 13일 교육위원회의 평생교육원 등 12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는 5시간 56분 동안 진행되어 기관당 평균 30분정도 밖에 감사를 할 수 없었다. 10월 13일 행정안전위원회는 소방청 국감 후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8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감사시간은 2시간 57분으로 기관당 평균 23분 정도 감사한 꼴이었다.

《2020년도 피감기관수 현황과 10개 이상 동시 수감한 피감기관 현황》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수	시찰제외	1일평균 감사대상수	10개이상대상 기관감사일수
운 영	9	2	2	4.5	0
법 제 사 법	76	11	11	6.9	4
정 무	46	10	10	4.6	1
기 획 재 정	29	9	9	3.2	0
교 육	64	7	7	9.1	2
과학기술정보 방 송 통 신	82	9	9	9.1	2

위원회	대상기관	감사일수	시찰제외	1일평균 감사대상수	10개이상대상 기관감사일수
외교통일	30	9	8	3.8	0
국방	63	10	8	7.9	3
행정안전	35	10	10	3.5	0
문화체육관광	56	8	7	8.0	2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37	10	10	3.7	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44	8	8	5.5	2
보건복지	22	8	8	2.8	0
환경노동	70	10	9	7.8	5
국토교통	31	10	9	3.4	0
정보	5	4	3	1.7	0
여성가족	6	2	1	6.0	0
계	705	137	129	5.5	21

《참고 : 2019년도 10개 이상 동시 수감한 피감기관 현황》

위원회	전체 감사일수 (시찰포함)	시찰제외 국감일수 (시찰 동시 국감일수는 포함)	전체 감사대상기관	1일 평균 감사대상기관 수	10개이상기관 동시수감일수
국회운영	2	2	9	4.5	0
법제사법	11	11	76	6.9	4
정무	11	10	45	4.5	0
기획재정	10	10	29	2.9	1
교육	8	7	91	13	4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	12	10	82	8.2	3
국방	11	9	64	7.1	3
행정안전	11	11	32	2.9	1
문화체육관광	10	7	75	10.7	4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10	10	34	3.4	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11	10	61	6.1	3
보건복지	10	9	45	5	3
환경노동	12	10	71	7.1	4
국토교통	10	10	32	3.2	0
여성가족	2	1	6	6	0
계	141	127	752	6.10	30

*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수치임

(2) '한마디' 말 못하는 들러리 기관

이번 인터넷 의사중계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5개 이상 피감기관이 있는 곳에서 감사위원과 피감기관 장관의 질의 답변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참석한 피감기관장 중에서 감사위원의 질의를 못 받은 경우가 지난 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19 위기에도 감사기관 조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관 뿐만 아니라 부서장 등 기관 증인은 기관수보다 훨씬 많은데 정무위원회의 경우 코로나 19로 인해 기관중 일부에 대해 출석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0년도 동시수감기관중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피감기관수 현황≫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법 제 사 법	10. 7. 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3
법 제 사 법	10. 12.월	법무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민정책연구원	3
법 제 사 법	10.13.화	대전고법 등	대전가정법원 청주지법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법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 7.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산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9
국 방	10. 7.수	국방부 등	국방정보본부, 국군의무사령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계룡대근무지원단, 국군체육부대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군인쇄창, 국군재정관리단,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방대학교,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국방정신전력원,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한국국방연구원,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24
문화체육관광	10. 7. 수	문체부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	2
문화체육관광	10.12. 월	문화제청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고궁박물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0.12.월	농어촌공사 등	축산물품질평가원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8.목	중소벤처기업부 등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
환 경 노 동	10. 12.월	기상청 등	수치모델링센터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9

≪2019년도 동시수감기관중 질의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피감기관수 현황≫

위원회	감사일	대상기관	질의를 받지 못한 기관 현황	기관수
법 제 사 법	10월 2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월 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국립전파연구원, 중앙전파관리소, 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시설관리단	9
국 방	10월 2일	국방부 등	국방정보본부, 국방시설본부, 국방부근무지원단, 국군복지단, 국군간호사관학교, 국방정신전력원, 국군인쇄창, 국방부조사본부, 국방부군비통제검증단, 국군재정관리단, 군사편찬연구소, 국방대학교, 국방통합데이터센터, 계룡대근무지원단, 국립서울현충원, 국방전산정보원, 국방홍보원,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뢰피해자지원단, 전쟁기념사업회, 국방전직교육원	2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산업·통상) 등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4
교 육	10월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한국교직원공제회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월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
보 건 복 지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6개 지방청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포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기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6
환 경 노 동	10월 7일	기상청	수도권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대구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APEC 기후센터	11
국 방	10월 8일	합동참모본부	합동군사대학교	1
정 무	10월10일	국민권익위원회	88관광개발(주)	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월10일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과학영재학교, 한국뇌연구원,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국립대구과학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월1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2
환 경 노 동	10월10일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강홍수통제소, 낙동강홍수통제소, 금강홍수통제소, 영산강홍수통제소	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10월11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녹색기술센터,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안정성평가연구소	7
환 경 노 동	10월14일	한국수자원공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워터웨이플러스, 한국상하수도협회	3
법 제 사 법	10월15일	법무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민정책연구원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월15일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10월16일	<중소기업 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연구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3
보 건 복 지	10월17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1
문화체육관광	10월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영상자료원	1
행 정 안 전	10월17일	공무원연금공단	일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1

(3) 심야국감은 겨우 5번, 열의를 가진 국감진행 안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밤 11시를 넘어서까지 열의를 가지고 국정감사를 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첫날 4개 위원회가 11시 넘어서 국정감사를 하였는데, 2020년도 국정감사에서는 첫날 2개 위원회만 밤 11시 넘어 까지 감사를 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는 오전 파행에 기인한 것이기도 하다.

야당인 **국민의 힘**은 주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지적하고, 야간에 정책질의를 할 것을 주문하는 지침을 내렸다고,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김남국 의원)에 의해 언론보도된 내용이 공개되기도 하였는데, 야간 국정감사는 대폭 줄어들어 밤 10시 이전에 대부분 마무리 되었다. 검언유착 오보 관련 이슈가 많았던 **과방위**의 15일 한국방송공사(KBS)에 대한 국정감사도 22시 47분에 마무리되었다.

《밤 11시 넘은 2020년도 심야 국정감사 현황》

일자	위원회	대 상 기 관	장소	시작	끝
10월 7일	외교통일위	외교부	국회	10:04	23:25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10:14	24:00:00
10월 8일	기획재정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회	10:02	23:30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국회	10:05	23:41
10월 15일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한국전력 등	국회	10:03	23:40

(4) 조기 종료 국감은 줄어

지난해 2019년도 국정감사에서는 10월 18일 금요일까지 6시 이전 국감 종료 횟수는 총 28회였는데,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10월 13일 국토교통위원회의 부산시청 국정감사가 11시가 넘어 시작해서 5시 30분에 마무리 되었으며, 그 외에는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가 17시 19분에 끝난 것이 전부였다. 국방위의 16일 육군본부 국정감사는 확인하지 못했다.

(5) 비행기 타는 시간이 더 많은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코로나가 막아

이번 외교통일위원회에 재외공관 국정감사는 2일간에 걸쳐 화상 국감으로 진행되었다. 10월 12일에는 주미대사관(종래 미주반)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되었고, 10월 14일에는 아침 9시부터 2시간을 나눠 반별로 나눠서 3개~4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화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참석하여 질의했다.

지난해 2019년도 국정감사를 살펴보면(외교통일위원회의 미주반 반장 박정 의원의 블로그를 보면), 8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 피곤한 가운데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다고 나온다. 미주반 첫 피감기관은 주UN대표부로 국회공보에 의하면 15:02에 시작하여 18시 57분에 끝나 3시 55분에 국정감사를 하였다. 이날 집권 여당의 당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은 불참했었다.

마찬가지로 2019년도에 구주반은 첫 국정감사를 주 벨기에 대사관 겸 주 EU 대표부였는데, 12시간 비행기를 타고 가서 2시 1분 정도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 파행성 정회는 줄어 듦 — 싸우면서 그냥 진행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첫날(10월 7일) 외교통일위원회가 북한군 총격으로 피살된 공무원 형의 증인채택논란으로 일시 파행하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네이버가 국회의원 연구단체를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주장에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끈하며 공방이 벌어져서 이원욱 과방위원장이 양당 간사에게 동영상 VOD를 통해 박 의원 발언 확인을 지시하면서 과방위가 잠시 멈추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8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빨간 안경논쟁으로 파행으로 하였으며, 법사위의 10월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공수처 후보추천위원 최후통첩(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계속 지연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26일까지 추천해달라며 야당에 최후통첩을 보냄)으로 일시 파행이 있었고,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 중 끼어들기로 인해 논쟁을 하다가 중식시간과

맞물려 정회를 정하였다.

국정감사 중 크고 작은 언쟁이 있었지만 파행이 없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지난 해에 이어 정착된 듯하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피감기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논란이 빚어졌으나 계속 진행하였다.

(7) 국정감사 불출석 의원은 대폭 줄어

국회공보를 통해 확인한 바, 이번 국정감사 전반전에서 감사위원 중 국정감사 전반전 전과정에 한 번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의원은 박덕흠 의원(환경노동위)와 윤상현 의원(문화체육관광위), 그리고 통일부 장관인 이인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었다. 농림출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의원도 3일 결석 및 청가를 하였고, 외교통일위원회의 김홍걸 의원이 2일 결석을 하였다.

외교통일위의 이낙연 더불어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보건복지위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여 질의를 하고 있다.

지난 2019년도에는 현역의원 장관이 많아서 국정감사 결석자 수가 많았고, 여야 지도부나 지역구 의원이 총선을 겨냥해 지역구 행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경우로 분석되었다.

2. 국정감사의 일반적 특징도 여전함

(1) 지역구 관련 질의

국정감사에서는 지역구 현안이나 민원을 국정감사 보충질의나 추가질의에 많이 하는데 올해에도 여전하였다. 지역민원을 외면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는 국정현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민원의 경우에는 서면질의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피감기관 제출자료로 시간 때우기 (노력한 결과물이 없음)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를 보면, 피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 이라는 말이 많고, 그 통계에 의하면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은 감사원 등이 지

적한 것을 내세우고 있다.

(3)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버티기

올해에도 국감 시작을 하면 자료요구를 하는 데, 자료 안주기, 버티기가 더 심해진 듯하다.

(4) 역대급 자리 안 지키기

코로나 19로 인하여 국정감사 질의 중에만 자리를 지키거나 여야간의 언쟁이 있는 경우에만 자리를 지키는 등 영상을 통해 텅빈 국정감사장의 간혹 비쳐지기도 하고 있다.

3. SNS시대이지만 국회의원의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아직도 캄캄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에는 국회의원 현황에 국회의원의 프로필 연락처 보좌진 이메일 주소 등을 소개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가 공란이거나, 소개되어 있어도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홈페이지(SNS 포함)를 볼 수 없는 경우가 감사위원 대비 35%(지난해 21%)나 되었다.

10명중에 3.5명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 5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국회의원 현황에 자신의 홈페이지나 SNS주소를 소개하고 있지 않았다.

홈페이지 소개율이 가장 저조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교육위원회로 소속위원 16명 중 7명밖에 소개되어 있지 않아 국회의원 홈페이지 소개율이 50%에도 못 미치는 43.75%였다.

가장 양호한 상임위원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소속위원 24명 중 21명의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소개되어 87.50%의 홈페이지 소개율을 보여 주었다.

문제는 국회의원의 개인 블로그나 페이스북 등이 NAVER 등 포털 인물소개에서는 검색이 되는 데도 국회 홈페이지에는 안내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로 초선이나 다선이라도 이번 4·15 총선에 입성한 의원들의 홈페이지 소개가 없었다. 의원들 대부분은 Naver의 블로그를 의정활동의 홍보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2020년도 국회 홈페이지에 의원 개인 홈페이지 주소 소개 현황》

조사일 10월 12일(월)~13일(화) 일과시간

조사대상 : 국회홈페이지 의원활동(국회의원 현황)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홈페이지(SNS포함) 소개 의원수	홈페이지소개율
법제사법	18	12	66.67%
정무	24	15	62.50%
기획재정	26	19	73.08%
교육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4	70.00%
외교통일	21	13	61.90%
국방	17	10	58.82%
행정안전	22	13	59.09%
문화체육관광	16	11	68.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10	52.63%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20	66.67%
보건복지	24	21	87.50%
환경노동	16	10	62.50%
국토교통	30	19	63.33%
계	**299**	**194**	**64.88%**

국회의원의 2020년도 국정감사 활동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지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299명 중 136명이 국정감사자료를 게시하고 있어 국정감사자료 게시율이 **45.48%**였다.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의원이 감사시간에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질의하는 동영상이 많았다. 통계에서는 단순 기사나 사진을 제외하고 피감기관 별로 보도자료나 질의 영상 또는 질의 요약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해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경우만 통계에 포함하였다.

《 국회의원 홈페이지의 2020년도 국감활동 게시율》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법제사법	18	8	44.44%
정무	24	12	50.00%
기획재정	26	10	38.46%
교육	16	7	43.75%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20	10	50.00%
외교통일	21	8	38.10%
국방	17	6	35.29%

상임위원회	의원현원	국감자료게시의원수	국감자료게시율
행정안전	22	11	50.00%
문화체육관광	16	7	43.7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9	4	21.0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30	13	43.33%
보건복지	24	16	66.67%
환경노동	16	8	50.00%
국토교통	30	16	53.33%
계	**299**	**136**	**45.48%**

Ⅲ. 2020년도 국정감사 전반의 화제성(話題性) 자료*[1)]

1. 전·현직 국회의원 정치인 출신 장관의 답변방법

(1) 이인영 통일부 장관 "개인사정"

10월 8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조성길 북한대사 대리 입국 사실 공개와 관련하여 심각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국민의 당 조태용 위원은 "오전 질의에서 조성길 대사대리 입국과 관련해서 공개가 의도적인 유출이냐고 제가 질문을 했고 우리 이 장관님이 의도적인 유출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그렇다고 하면 보안 사고니까 당연히 중요한 보안 사고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제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이 장관님이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보안 조사를, 어떻게 유출이 된 건지 보안 조사를 하시는 것이죠, 지금?" 이라며 심각하게 질의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다가, 조 의원은 "왜 그러냐 하면 의도적인 유출이 아닌 경우에는 보안 사고고 이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큰 보안 사고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관님 표정이 오늘 좀 편안하시기 때문에 심각함을 제가 못 느꼈습니다." 고 하면서 장관의 표정을 문제 삼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위원님,

* **현장감과 팩트확인을 위해 신문·방송의 보도내용을 일부 그대로 원용하였음을 밝힘** (이하 같음)

오늘 제 표정의 문제는 조금 저 개인적인 사정과 관련된 문제가 있으니까 다르게 오해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면서도 유출과 관련된 내용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았다.

(2) 유은혜 교육부장관 "정보없다"

10월 7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북한 문제가 이어졌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은 “북한군에 총살된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한 게 맞냐” 고 물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는 것밖에는 정보가 없다” 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김 의원이 “김정은이 계몽군주냐” 고 묻자 유 부총리는 “아니다” 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사진이 실린 고교 교과서를 꺼내보이며 교과서가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부총리는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다” 며 “(현재 교과서가)북한에 대해서도 정확한 인식을 갖도록 한다고 본다” 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유 부총리에게 “6.25가 북침이냐, 남침이냐” 고 물었다. 유 부총리는 “남침이다” 고 답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무위원에게 사상검증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린다” 며 “남침, 북침을 묻는 건 합당하지 않다” 고 지적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초등학생도 아는 문제를 물어본 것은 정부 대응이 미온적이란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 이라며 “위원장이 유치하게 ’사상검증’이란 말을 쓴 것은 유감스럽다” 고 반박했다.

(3)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국토교통위원회의 10월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향해 “테스형 가사가 우리 국민을 위로하는 마음을 절절히 담고 있다. 들어보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 달라” 고 노래를 틀었다.

김 장관은 갑자기 울린 노래에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숙이고 웃음을 보였다. 송 의원은 공인중개사들의 목소리를 담았다며 “전세 매물이 실질적으로 제로”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없다” (경남 창원시) 등의 영상을 보여줬다.

그는 “서울은 물론 지방까지 안 오른 게 없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 이라며

“대중가요에는 국민들의 시대정신과 정서가 묻어있다. 국민이 어려울 때 고통을 해결해주는 게 정부 역할인데, 정부의 주택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험난해졌다” 고 질타했다.

송 의원 “국민의 불만과 불신, 불안이 극대화돼 있는 상황” 이라며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지 묻자 김 장관은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고 답했다

(4)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불가피한 선택"

10월 7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개천절 집회 시위와 관련해 과잉 대응 논란이 많다. 경찰이 국민을 협박하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다” 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데는 찬성한다. 그러나 원칙이 있어야 하고 국민 건강권과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절히 조화하는 고민을 했어야 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드라이브 스루 집회는 안된다고 하는데, 그럼 드라이브 스루 검진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나” 라면서 “또 같은 날 같은 시간 과천 서울공원에는 인파들로 꽉 찼다고 한다. 정부 실정을 비판하는 광화문 광장은 차안에만 있어도 감염이 되고 딴데는 그렇지 않다? 이게 논리가 맞느냐” 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염 방지의 중요성은 알지만 동일한 잣대로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서 의원의 지적에 대해 “방역당국이 집회를 금지했으니 막긴 해야 하는데 차벽설치는 경찰로서도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지 않나 한다” 고 밝혔다.

(5)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판넬답변"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착한 선결제 방송 광고를 중기부 홍보예산에서 썼는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아니냐” 고 하자 직접 준비한 그래프 판넬을 꺼내 대답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질의하는 의원 배려 차원의 대답을 하며 정책 질의에 해법도 제시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예산을 초과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해 소상공인에게 혼란을 가져왔다’ 고 하자 박 장관은 “예산보다 많은

확인서를 발급할 수밖에 없는 것은 기관 간 데이터 공유가 안 돼있기 때문”이라며 “국세청만이 소상공인 매출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기에 국세청이 이를 확인해야 한다”고 기관 간 협업 강화를 선결과제로 제안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보좌진들의 표정은 굳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피감기관으로 하여금 충실한 대답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질의 요지를 미리 공유해줬던 '선의'가 본의 아니게 같은 당 의원 '망신주기'처럼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6) 추미애 법무부장관 "27번 윽박”

10월 12일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의원의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다”라는 지적에 **“27번이나 윽박질렀겠죠”**라고 맞받았다.

추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아들의 군 휴가 문제를 언급하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수사가 잘못됐으면 근거를 가지고 하시라” “거짓말하지 않았다” “안 아픈 아들도 아니고 군대를 안 마친 아들도 아닌데 뭘 잘못했는지부터 의원님이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장관의 거짓말은 국회 영상 속기록에 다 남아있다. 그 거짓말까지 장관님이 임명했던 말 잘 듣는 검사들이 참말로 바꿔줄 순 없다”며 “국회 속기록이나 이런 걸 직접 다 보진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보니 국회 와서 한 거짓말 횟수가 27번”이라고 지적했다.

추 장관이 “27번 윽박질렀겠죠”라고 답변한 이후 법사위 국정감사는 오전 파행 이후 또다시 고성의 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했지만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감사위원께서 호통만 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느냐” “감사위원들이 호통치는 것을 도와주라는 것이냐”며 의사진행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계속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요구하자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간사인 김도읍 의원에게 발언권을 줬다. 김 의원은 “오늘 오전부터 ‘추미애 방탄국감’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며 “‘소설 쓰시네’부터 해서 의원이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 동문서답하고 추미애 장관만 나타나면 시끄럽다. 그래놓고 윤한홍 의원 질문에 27번을 윽박질렀다고 하는 추 장관의 태도에 야당 간사가 지적을 못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2. 관심을 끈 국정감사장의 '사과'

(1) 강경화 외무부장관의 '남편사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0월 7일 남편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미국행과 관련, "국민들께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해외여행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시는 가운데 제 남편이 해외로 출국한 것에 대해 경위를 떠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이 '배우자의 해외여행이 오래 전부터 계획됐던 것이라면, 상황을 고려해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개인 사이기에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만, **제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라고 답해 국감장에서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그는 이 의원이 '고위공직자는 불법 이전에 도덕적 측면에서 우위에 서야 한다. 때로는 일반 국민보다 더 불편 느껴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백신사과'

'K-방역'으로 높게 평가받으며 코로나19 사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사과를 했다.

정은경 청장은 7일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 뒤 초대 청장으로서 첫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 청장은 최근 문제가 된 독감 백신 상온 노출 사고와 관련해 쏟아지는 쏟아지는 여야 의원들 질타에 거듭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상온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을 누가 맞아야 하나,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정 청장부터 접종해야 한다" 고 질타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질병청에서 상온 노출 의심 사례가 없다고 했다가 3천 건 넘는 접종 사례가 나왔는데 국민들이 신뢰하는 게 가능하겠냐" 고 말했다.

정 청장은 모두 발언부터 "최근 발생한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공급 관련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는

사과로 시작했다.

정 청장은 이어 “다양한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백신의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정부 조달 백신을 접종한 사람 가운데 이상 반응은 12건 보고됐지만 모두 경증에서 회복된 것으로 확인했다” 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국가예방접종 계약 조달방식, 콜드체인(냉장유통) 체계, 의료기관 접종 관리 전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점검하고, 범부처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3)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의 ‘5 · 18 사과'

5 · 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대해 현직 육군 참모총장이 40년 만에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다.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사죄’라는 표현과 함께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고개를 숙였다.

1980년 5 · 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이 개입한 데 대해 현직 육군 참모총장이 사죄한 것이다. 남 총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군의 존재 목적이라며, 민주화 운동에 군이 개입한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사과 발언은 민주당 설훈 의원 질의 과정에서 나왔는데 육군에선 미리 준비한 답변은 아니라고 전했다.

(4) 이동걸 산업은행장의 '건배사 사과'

이동걸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10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서민금융진흥원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했던 건배사 논란에 대해 “발언 실수에 대해 이미 두 차례 공식적으로 사과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사과한다. 실수한 것을 인정한다“고 거듭 사과하면서도 “실수를 인정하지만,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강조했다.

(5)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의 ‘옵티머스 사과'

10월 16일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NH투자증권의 정영채 사장은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펀드를 팔아달라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전화를 건

관계자는, 금융업계의 '큰 손'인 군인공제회 출신의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으로 정 사장은 김 고문의 전화를 받은 뒤 실무자에게 옵티머스 쪽을 만나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업무상 자주 받는 유형의 전화인데다 단순히 판매 여부를 검토해보라는 의미였지만, 책임은 부정할 수 없다며 사과했다. "고객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의적 책임이 무한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무리 그래도 옵티머스 상품 판매가 실사 하루 만에 결정된 건 외부로부터의 관여가 의심된다고 추궁했다.

(6) 김종석 기상청장의 '기상오보 사과'

김종석 기상청장이 외국의 날씨 예보 애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기상 망명족'을 언급하면서 올해 여름 장마철 예보 적중에 실패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올해 8월까지의 강수유무정확도는 지난해보다 2%포인트 넘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김 청장은 "여름철 장기 예보와 일부 지역의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한 예측은 국민의 기대에 비해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국민들은 기상청의 예보를 홈페이지나 방송을 통해 확인하지만, 기상 상황 변화에 따른 수정 예보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기상 예보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기상 망명족이 대두했다**"고 자인했다.

3. 열전 또는 파행을 야기한 의원의 '한마디'

(1) 고민정 의원의 '빨간 안경'

10월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색깔론' 공세가 나오면서 오후 한 때 여야간 유감 표명 여부를 두고 신경전이 벌어졌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에 앞서 한무경 국민의힘의 발언을 문제삼았다. 한 의원은 앞서 오전 질의에서 "지난해 9월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K 론칭' 행사를 앞두고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노바운더리'와 급하게 수의 계약을 맺었다" 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한 의원은 "노바운더리는 브랜드K의 다른 행사 준비를 위해 해외문화홍보원과도 2억2500만원 규모 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데 노바운더리에 돈을 지원하기 위

해 행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노바운더리는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다.

이에 박 장관은 “당시 대통령의 태국 순방은 K팝을 알리는 목적이 있었는데 당초 초청가수였던 2팀이 빈약해보인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4팀으로 늘려서 진행했다”며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 섭외 과정에서 노바운더리가 수의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지시로 결정되거나 한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걸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은 “오전에 한 의원님께서 태국 케이팝(K-POP) 공연에 대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겠다”며 “공연팀이 2팀이었는데 왜 4팀으로 늘었나, 그리고 왜 예산이 늘었나 문제를 지적했는데 안 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순방은 개인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자체“라며 “공연팀이 늘지 않았다면 오히려 국가 위상을 손상시키고, 예산이 늘지 않았다면 K-POP 스타들을 애국을 이유로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러한 사안들을 상식적으로 바라봐주면 좋겠다”며 “**결국 빨간 안경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세상이 왜 빨간지를 물어보기 전에 상식적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지에 대한 생각이 선행 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죠? 대변이라면 논점을 제대로 파악해달라”며 즉각 반박했다. 한 의원은 “가수가 증가한 문제가 아니라 (행사 진행을) KBS 아트비전이 아닌 다른곳에서 입찰했냐는 것”이라며 “빨간 안경 이야기는 의원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고 의원이 “의원이 자신의 의견을 밝힐수 도 있는거 아니냐”고 반박하자 한 의원은 “똑바로하세요 누구는 할말이 없어서 이때까지 참고 있는 줄아세요”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두 의원의 신경전에 여야 간사가 중재에 나섰다.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곳은 정부 정책과 하는 일을 감사하는 장소다. 상대 의원의 발언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한 의원의 발언을 왜곡해 폄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상대 의원에 ‘상식에 어긋나게 빨간 안경쓰고 세상 바라본다’는 표현은 모욕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속기록을 삭제해주시고 위원장님께서 의견 표명을 해 달라”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도 “제가 느끼기에 왜곡과 폄훼까지는 아니지만 해석의 문제 여지가 있다”며 “한 의원도 ‘대변인까지 한 분이 맥락을 모르느냐는 식’으로 말했다. 서로 유감표명을 하라고 맞서는 상황보다는 서로가 상대를 지칭하는 걸 지양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학영 위원장은 “위원장이 개인 의원들의 발언에 문제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상호간에 토론하면서 정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생각의 차이를 확인하는 방식이 좋겠다. 형식에 맞는 선에서 파행되지 않도록 발언해달라”고 당부했다.

(2) 윤건영 의원의 '고장난 레코드'

외교통일위의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도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을 놓고 여야간 고성이 오갔다.

야당이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 여당에서 “**고장난 레코드냐**”는 반발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희생자 자녀가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언급하면서 “지금이라도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로서 ‘당신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사람이 죽을지 모르는 상황인데 구출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한 바가 없다”며 “시간이 충분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을 구해주지 않은 데 대해 대통령이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자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 “(피살 당시) 불특정한 첩보가 모여 있는 상황이어서 그것만으로는 군사작전이나 무력활동을 할 수 없었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반복해서 고장난 레코드를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당시에는 정보가 충분치 않았다는 기존 정부·여당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야당의 사과 요구를 비판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기현 의원이 “(윤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비판하고 있다”면서 사과를 요구했다. 윤 의원도 지지 않고 “대통령에게 무릎 꿇으라고 한 게 누구냐”며 맞섰다.

이후 여야 의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언하면서 한동안 소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은 상황이 정리된 뒤 “윤건영 의원이 파이팅이 좋은 것은

알겠지만, 전반적인 외통위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조심해 달라” 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동료 의원의 이야기에 끼어들면 서로 감정이 격해질 수 있다” 며 “끼어들기나 고성 지르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밝혔다.

(3) 장제원 의원의 '김남국 의원'

장 의원은 특히 김남국 민주당 의원을 향해 “말끝마다 (야당 의원의 질의에) 개입해서 장관의 답변을 왜 본인이 하느냐” 며 “이렇게 그냥 두면 야당 의원도 민주당 의원들이 질의할 때 방해할 수밖에 없다” 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제원 : “상대 의원 발언 껴든 거 반성하세요. 사과하세요.”

김남국 : “상대 의원 존중하면서 민생 챙기는 국회 만들어주세요.”

김도읍 : “본인이 조금 전 한 행동도 기억이 안나요?”

윤호중 : “위원장이 언제까지 참아야합니까. 여기 장마당 아니잖아요.”

소란은 계속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장 의원이 자신에게 반말을 했다며 계속 사과를 요구했고, 장 의원은 급기야 “껴들지 좀 마” 라며 소리를 질렀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여당 위원석을 향해 읍소했다. 윤 의원은 “우리 당은 3분의 1이다. 여러분들 2번할 때 우린 1번 한다” 면서 “여러분들이 입법부인지 행정부 공무원인지 모르겠다” 고 질타했다.

여당에선 김종민 의원이 중재에 나섰다. 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장관의 답변을 정해놓고 의도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질문을 하면 (장관의) 답변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다” 면서 “(장관의) 답변을 충분히 듣도록 운영해야 한다. 답변을 듣지 않고 정치적 공격만 하면 회의에 임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하다” 고 말했다.

이어진 의사진행발언에도 ‘껴들기’와 ‘반말’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언쟁은 계속됐다.

(4) 안병길 의원의 '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농지법 위반 공방장으로 변했다. 경남 양산 사저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야당의 공세에 맞서 여당 의원들은 '적법한 절차'라고 방어에 나섰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은 “자경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직접 맡아야하는 것이지 한두번 가면서 농촌 텃밭을 꾸미는 건 자경이 아니다“며 “청와대에서 양산

까지 500㎞나 떨어져있고, 농지증명 발급자격이 하나도 안 맞는데 어떻게 허가가 나온 것이냐"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해당 업무는 지자체의 고유 업무" 라며 농식품부와 연관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 농지가 없도록 단속하는 게 농식품부 입장인데 실태조사는 하느냐" 고 지적했다.

이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고 전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하려는 사안도 아니고, 법적절차를 따른 것" 이라며 "좀 야멸찬 국감이다" 고 유감을 표했다.

(5) 박대출 의원의 '네이버 국회농단'

10월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관련한 국회의원 연구 단체를 놓고 고성이 오가는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올해 7월 출범한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에 대해 "네이버가 주도하는 인터넷기업협회가 국회에까지 손을 뻗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 라며 "**네이버의 국회 농단 의혹**을 진상 규명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인터넷기업협회가 포럼 출범 전에 이미 대표 선임과 운영 계획 등을 세워놓았다고 주장하면서 협회 작성 문건을 증거로 제시했다. 이 포럼의 공동대표는 네이버 부사장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다. 마침 이날 과방위 국감장에서 박 의원의 맞은편에 앉아 있던 윤 의원은 그야말로 발끈했다. 윤 의원은 "박 의원이 국회디지털경제 혁신연구포럼을 매도하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네이버가 국회의원을 사주한다는 모욕적 얘기까지 하면서 여당뿐 아니라 야당 동료 의원까지 매도하는 것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 기업이 여야 의원을 휘둘러 포럼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국회를 접수하려고 했다는 게 말이 되나. 의원들은 다 허수아비인가" 라며 거듭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포럼이 인터넷기업협회가 주도하는 계획에 따라 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다" 라면서도 "이런 추진 계획을 일개 협회가 국회를 상대로 하며 구성했다는 것" 이라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발언 시간이 지나 마이크가 꺼진 이후에도 양측에서는 한동안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간사 박성중 의원은 이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윤 의원을 향해 “본인은 과방위 사보임도 걸려 있기 때문에 말에 신중을 기해달라”며 “특히 네이버 관련해서는 부사장까지 했고 자유롭지 못하다. 가능한 자제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최근 “카카오 들어오라 해” 문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윤 의원의 상임위 사보임 요구를 한 상황을 가리킨 것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정치 공세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지켜야 할 선은 있다. 어떤 의도로 질의했는지 잘 안다”며 “의원 연구단체가 바깥의 협회·단체 등과 논의해 연구단체를 만드는 게 무수히 많다”며 윤 의원을 엄호했다. 결국 이원욱 위원장이 나서서 논쟁을 중단하고 문제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지워달라고 주문하면서 이번 논란은 일단락됐다.

4. 이번 국정감사장에 나타난 국감 소품 일부 사례

(1) 방역지침에 의한 국정감사장 칸막이벽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국정감사장에는 칸막이 장벽이 설치되었다. 위원석과 피감기관 석 모두 설치되었는데, 상대방을 볼 수 있지만 여야당의 견해차, 위원과 피감기관의 입장차 간극이 너무 커 국정감사장의 칸막이벽처럼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 것을 느끼게 했다.

(2) 송석준 의원의 나훈아 '테스형'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장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나훈아 가수의) 테스형이라는 노래 가사에 국민의 절절한 마음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다”며 “장관도 듣고 국민의 마음을 읽어달라”고 말한 뒤 노래를 틀었다.그는 “국민이 어려울 때 위로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냐”며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른다”고 꼬집었다.

(3) 윤재갑 의원의 중국산 민어

10월 8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재갑 민주당 의원이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직접 공수해 온 중국산 ’큰민어’을 등장시켰다. 윤 의원은 “민어가 아닌데

도 횟집에서 민어라고 속여서 팔리고 있다" 며 학명, 육질, 가격이 국산과 다른 중국산 '큰민어'가 '양식 민어'로 둔갑돼 유통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유관기관과 협력해 빠른 시간 내로 품종명 개정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답했다.

중국산 홍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중국산이 국산으로 둔갑되는 것도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했다.

(4) 문진석 의원의 판스프링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에서 '판스프링'을 들고 정부의 판스프링 불법 설치 단속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다. 문 의원은 목장갑을 끼고 판스프링을 들어올리며 불법으로 차량에 장착한 판스프링이 떨어져 인명사고까지 발생한 문제를 지적했고,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지금까지는 튜닝으로 보지않고 경미한 사항으로 봤으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어서 단속을 강화하겠다" 고 답했다.

(5) 김형동 의원의 소방헬기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소방헬기 모형을 들어 보이며 정문호 소방청장에게 질의하였다.

(6) 류호정 의원의 배선 노동자 복장 착용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1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배선 노동자의 작업복을 입고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Ⅳ. 매일매일 깜짝 놀란 통계 및 자료 편린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피 국회의원 게시 감사자료 중심)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원 보도자료와 정책자료가 올라오고 있는 바, 문재인 정부에서도 낙하산, 비리, 혈세낭비 여전함을 알려 주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일깨워 주고 있다. 즉, 국정감사가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고 있다. 매일 매일 국정감사모니터통신에서 요약발췌한 내용을 일자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2020년 10월 7일(수)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액 23억원

지방보조금 136억원 중 1억3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빼돌려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하거나 1천만원가량을 도박자금으로 쓰는 등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8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적발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규모는 23억원이었다.

○ 마약 사범 꾸준히 증가, 최근 3년간 35,241명 단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마약류 사범은 35,241명이며 그 중 공급사범이 12,560명 그리고 단순사범이 22,681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군 하극상 연평균 200건

지난 3년 간(2017~2019년) 연 평균 약 200건의 군내 하극상이 벌어진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상관 목에 밧줄을 걸고 무릎으로 얼굴을 구타하거나, 소주병으로 폭행하는 등 수위 높은 폭행도 다수 발견됐다.

10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에서 입수한 '최근 5년간 군 하극상 현황'에 따르면, 2016년 105건이던 군 내 하극상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205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8년 191건, 2019년 188건으로 소폭 줄었지만 2016년 대비 여전히 약 두 배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다. 특히 지난 7월까지만 해도 벌써 72건의 하극상이 발생한 상태다.

○ 폐업하지 못하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환경오염 우려 좀비주유소 51개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10월 7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5년간 폐업한 주유소는 1,051개, 휴업한 주유소는 587개로 밝혔다. 2019년 폐업주유소는 201개로 전년 대비 37.3 증가한 반면 휴업주유소는 386개로 전년 대비 약 3배나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주유소들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업을 하기 전 토양을 복구하고 오염물이 검출되지 않아야 시설물 폐쇄가 가능하다. 철거비용으로 약 7,500만원, 토양정화비용 약 7,500만원으로 총 1억 5천만원의 비용이 든다.

○ 18개 중앙 부처 1만2000명 공무원 중 3,006명(25%) AI로 인력 대체 가능

AI, 빅데이터 등 미래 신기술이 도입되면 중앙직 공무원 25%의 업무가 대체 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정부인력운용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8개 중앙 부처 공무원 1만2,000명(2019.9월 기준) 중 신기술 도입으로 3,006명(25%)이 대체 가능했다.

○ **자회사 대표이사 10명 중 6명 모기업 낙하산**

국민의 힘 유경준 의원실이 한국노동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자회사 운영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49개 모회사의 57개 자회사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자회사 중 모회사하고만 거래하는 경우가 84.2%(48개 자회사)에 달하며 다른 기관과 거래를 하고 있는 자회사는 자회사 평균 자본금이 9억 2천 262만원인 반면 자본금 대비 모회사 출자금 비율이 94%(8억 6천 875만원)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무엇보다, 자회사 대표이사 10명 중 6명이 모회사 출신 낙하산 인사이며 임원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 훨씬 높다.

○ **농안기금, 농특회계 사용하여 해외 프랜차이즈 업체를 홍보**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속초・인제・고성・양양)은 10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농식품부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이하 농특회계)를 사용하여 스타벅스와 베스킨라빈스 등의 해외 프랜차이즈업체를 홍보, 지원, 이용 장려해주는 것을 지적했다.

○ **북경 해외사무소는 파견자 보수, 주택임차료 지원비로 전체 예산 70% 이상 지급**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공공외교법상 유일한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서 각 나라에 해외사무소를 두고 각종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작 해외사무소의 현지 사업비 비중이 전체 예산의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당, 재선)이 한국국제교류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해외사무소 8곳의 사업비 집행액은 총 5억7400만원으로 전체 예산 28억 2100만원의 20.34%에 불과했으나 정작 파견자 보수와 주택임차료 지원비는 각각 44.20%, 13.89%로 전체 예산의 57.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해외사무소에서 파견자 보수와 주택임차료 지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의 2배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북경 사무소와 베를린 사무소는 사업비 대비 파견 지원 비용이 4배 이상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 공무원 연간 시간외근무수당, 4인가구 재난지원금 100만원의 최대 7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이 1인당 최대 650여 만원에 달했다. 이는 올해 5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4인 가구 기준)의 7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당 연평균 가장 많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은 지자체는 충청남도로 650여 만원이었고, 가장 적은 지자체는 147여 만원인 강원도 정선군으로 두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같은 지방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은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수당 지급 규모로도 충청남도가 약 11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 송파구가 약 115억원, 전라북도가 약 11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 **집주인 1명이 202명 전세금 413억원 떼먹어**

집주인 1명이 무려 202명의 세입자에게 413억원대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 '2017~2020.6월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중복사고 현황'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의 임대

인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사례가 202건에 달했으며, 세입자의 피해액만도 413억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봉 1억 넘는데…직원들 '공짜 오피스텔'**

6년 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한국예탁결제원이 여전히 100채가 넘는 '공짜 오피스텔'을 직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예탁원이 정부 지침까지 어겨가며 6년이 넘도록 직원들에게 과도한 주거 혜택을 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이전 공공기관의 숙소·사택 협의 승인 현황' 등에 따르면 예탁원은 현재 102채의 이주직원용 숙소(오피스텔)와 98채의 순환근무자용 사택(아파트) 등 총 200채의 숙소를 운영하고 있다. 부산 본사에 근무하는 직원 400명 중 절반 가량이 예탁원이 제공하는 '공짜 숙소'에 살고 있는 셈이다. 이 곳에 거주하는 직원은 관리비만 부담하면 월세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 예탁원은 부산 이전 직전인 2014년 3월 직원들의 초기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135억원을 들여 부산 수영구에 있는 직원 숙소용 오피스텔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2. 2020년 10월 8일(목)

○ **한상혁 방통위원장, 청문회 한달 쓸 오피스텔, 벽 공사 2000만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3753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한 위원장은 청문회 준비를 위해 한 달가량 오피스텔을 빌려 쓰면서 2047만 원을 들여 내부 공사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방통위원장 청문회 준비 예산 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한 달여 동안 청문회(8월 30일 실시)를 준비했다.

○ **산식도 없이 주파수 재할당 대가 추계 5.5조원 예산반영**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청주청원구)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 방발·정진기금 상의 주파수재할당 대가 산정 내역'에 따르면, 정부가 주파수재할당 대가산정 연구반이 가동 중인 상황에서 산정 기준이 없이 주파수 재할당대가를 5.5조 원으로 계산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다.

○ **코로나19 가짜뉴스 196건 삭제, 접속차단 조치**

허위 조작 등을 통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 할 우려가 있어 삭제 또는 접속차단 조치를 받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가 196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관련 사회혼란 야기 정보 심의 현황'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총 4,475건의 코로나19관련 신고 정보를 심의한 결과 196건의 정보에 시정요구를 했다.

○ **순경시험 고사장, 2,684개 중 25개에서 정오표 사전 공개**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제2차 순경공채 및 경찰행정학과 경력채용 필기시험"에서 정오표가 사전 공개되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 고사장은 전체 2,684개 중에 경기남부와 경남 등 25개 고사장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시험은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여 한국사의 경우 과목별 전공자가 와도 시험 시간인 100분 안에 풀기 힘들어 푸는거나 찍는거나 별반 차이 없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 공직자윤리위, 퇴직공무원의 83% 재취업 승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모두 3,882건을 심사해 3,224건(83%)에 대해 취업 가능·승인을 내렸다.

특히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 퇴직자는 대기업을 비롯하여 대형로펌, 산하기관이나 관련기관으로 재취업한 사례가 상당했다. 감사원의 정무직 및 고위공무원은 SK, 삼성생명보험, 부영주택,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재취업했다.

검찰청 출신은 호반건설, 한화, 제주항공, 한미사이언스, 롯데케미칼 등의 사외이사 및 고문 등으로 취업 승인을 받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은 삼성전자와 현대건설 등에, 행정안전부 출신은 부영주택,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컴MDS, 한국해양교통공단 등에 재취업했다.

따라서 퇴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처의 취업 심사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 경찰 수사잘못 192건중 징계 고작 4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북 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2017~2020년 9월) 경찰의 수사가 잘못됐다고 이의를 제기한 수사이의 신청 건수는 5400건으로 이 중 실제 수사과오가 인정된 건은 192건이었고, 수사과오를 인정받은 192건 중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징계를 받은 건은 4건(2.1%)에 불과했다. 징계수위는 모두 '견책'이었다.

○ 지난 3년간 존속 가정범죄 6,451건, 살해 198건 발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까지 3년간 존속대상 가정범죄 6,451건이 발생했다. 특히 경기도와 서울이 3,202건으로 전체의 50%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유형별로 보면 존속폭행이 4,50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존속상해 1,211건, 존속협박 680건 순이었다. 지역으로는 모든 범죄유형에서 경기도가 존속폭행 1,370건, 존속협박 228건, 존속상해 21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 1주택자 종부세 부담 없다더니, 실제로는 5년뒤 2배 올라!

서울 강남(병)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주택분 보유세수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1주택자가 부담할 연평균 종부세는 2021년 232만원에서 2025년 488만원으로 5년간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1주택자 등 실소유자의 경우 작년 12·16대책 때와 비교해 부동산 세제의 변화가 거의 없다"고 말했으며, 홍남기 부총리도 지난 8월 기자간담회에서 "1주택자에 대해선 세금인상이 거의 없다"고 말한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온 것이다.

○ 기재부, 국고보조사업 '가족끼리 거래' 2,024건 적발

기획재정부가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부정징후 의심사업 통보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2018년부터 실시한 모니터링에 따라 현재까지 국고보조사업에 약 5,053억원 규

모에 해당하는 11,466건의 부정징후가 의심된다고 각 부처별로 통보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세금계산서 등 증빙 서류가 없는 경우가 4,743개로 가장 많았다. 죽은 사람에게 월급을 주는 등 인건비를 부정하게 쓴 사례도 3,306개로 많았다. 적발된 사업 중에는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일감을 떼어준 사례도 2,024건(18)이었다. 그간 부정수급 유형들을 분석해온 결과 보조사업자와 거래처가 가족인 것으로 확인되는 '가족간 거래' 부정 사례는 문제가 심각하다. 기재부는 보조사업자 정보와 거래처 정보에 들어간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통해 거의 전량 '가족끼리 거래'를 적발해내고 있다.

○ 갈수록 높아지는 고소·고발사건 접수, 실제 기소가능한 내용은 20% 미만

최근 고소사건이 증가세를 나타내며 70만건 이상에 육박했지만, 실제 기소가 가능한 내용은 20%에 못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서울 중랑구 갑, 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소사건 접수 통계는 ▲2017년 668,360건 ▲2018년 714,111건 ▲2019년 772,040건으로 매년 5만 건 내외 증가하지만, 같은 기간 기소는 ▲2017년 135,601건(20.3%) ▲2018년 135,340건(19.0%) ▲2019년 140,519건(18.2%)을 기록해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었다.

형사법 체계가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1,068명이 피고소되는 것에 반해 일본은 7.3명으로 무려 146.6배 차이가 났다. 물론 국가 간 법제도 운용 형태나 시민의식·민주주의 척도 등으로 단순 비교가 가능하진 않지만, 14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주목할 만 하다.

○ 문재인 정부 4년차…농업예산 비중 역대 최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예산은 전년 대비 2.3%p 증가한 16조 1,324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국가 전체예산 대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비중은 3.6%였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18년 3.4%, 2019년 3.1%, 2020년 3.1%로 감소했고, 2021년 정부안은 3% 마저 무너진 2.9%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3. 2020년 10월12일(월)

○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 범죄 징계 직원 427명 달해

올해 4월 광명우체국 소속 9급 집배원이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직권면직 당했다. 당시 이 집배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70%였다.

최근 5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직원 가운데 210명이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66.6%가 직접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인 것으로 집계됐다.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본 직원 범죄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범죄(벌금형 이상)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우본 직원은 427명에 달한다.

○ 최근5년간 식품위생, 원산지, 계약위반 등으로 2,278개 업체 적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운영하고 있는 eaT(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불공정 입찰과 편법·비리·불성실업체들의 난립이 끊이지 않으면서 eaT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까지 최근 5년간 총 2,278개 업체가 부정행위로 적발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aT 약관 위반이 677건, 원산지 위반이 126건, 식품위생 위반이 678건, 대리납품, 서류위변조 등이 571건, 입찰・계약위반이 217건으로 확인되었다.

※ 적발된 총 2,278건 중 경기도가 620건으로 1위의 불명예를 안았고 부산이 369건으로 2위, 경남이 218건으로 3위의 순임.

○ 한국에서 5조원 넘게 벌면서 법인세는 0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전북 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에도 한국에서만 5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면서 법인세는 1원도 내지 않는 외국계 기업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조원 이상의 매출을 거두면서도 법인세를 전혀 내지 않는 기업만 9개나 된다.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9년 수입금액 구간별 외국계 기업 법인세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은 외국계 기업은 전체 신고법인 10,630개 가운데 4,956개로 46.6%에 이른다. 과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법인세 0원 납부 외국계 기업은 2018년에 비해 오히려 265개 늘어난 수치이다.

○ 작년 '투잡' 공무원 1410명

일부 공무원들이 겸직을 통해 월급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있어 공무원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겸직허가를 받은 공무원은 1,410명으로 나타났고, 연간 겸직 수입액이 5천만원 이상인 공무원이 5명이었다.

겸직으로 최고 수익을 벌어들인 공무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통해 월 3천만원씩, 연간 3억 6천만원의 소득을 벌었다. 법무부 4급 과장은 의사를 겸직하며 월 1,450만원씩, 연간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또 다른 법무부 과장도 연간 1억 3,200만원의 수익을 거두고 있었다. 관세청 공무원은 임대업을 통해 연봉보다 많은 연 7,152만원을 벌고 있었다.

○ 전력소비 상위 30개 대기업 全가정보다 전기 더 쓰고 전기요금은 5925억 덜 내

지난해 전력을 가장 많이 구매한 상위 30개 기업이 모든 가정을 다 합한 전기보다 2.4GW를 더 쓰고도 요금은 5925억원을 덜 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력 다소비 30개 대기업은 작년 한해 총 75GW를 소비하고 한전에 7조 312억원을 지불했다

같은 기간 가정용 전력은 총 72.6GW가 판매됐으며 한전은 가정용 전력 요금으로 7조 6237억원을 거둬갔다.

○ 공무원 우울감 호소 3년간 7만 7천건에 달해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의 질의자료에 의하면, 마음건강센터의 프로그램은 개인상담, 심리검사, 단체 프로그램 총 세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3년간 이용 건수가 총 7만6554건에 육박함. 2019년 상담실적은 총 2만 79건, 2018년도 2만 5839건, 2017년 3만636건으로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계속해서 마음건강센터를 찾고 있음. 그 중 심리검사가 평균 1만1376건으로 매년 1위를 차지함.

4. 2020년 10월 13일(화)

○ 이만희 의원, 국내 과수원 바이러스 감염률 45%에도 무병묘목 보급률은 1%, 대책 마련 시급

지난 2016년 농식품부가 「무병묘목 생산유통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2020년까지 무병묘 공급 비중을 30%까지 높이겠다고 했지만 현실은 참담했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제출한 무병묘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과수원 바이러스 감염률이 45%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2018년 기준 국내 무병화 묘목 공급률이 1.1%에 불과하고 지난 2015년 3.8%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병묘목은 무병화 과정을 통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으로 일반 묘목보다 바이러스 재감염율이 낮고 과수의 품질 및 착과량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교육부 등 7개 중앙부처,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교육부 등 7개 중앙부처가 여전히 공무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중앙부처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7개 중앙부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부처는 ▲교육부(2.27%), ▲국방부(2.41%), ▲소방청(2.86%), ▲국무조정실(2.87%), ▲검찰청(3.19%), ▲해양경찰청(3.14%), ▲산림청(3.3%) 등이었다.

○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업비, 한국이 90% 가량 감당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명칭 하에 추진되는 각종 선거 관련 사업비, 인건비 및 운영비를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거의 독자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광명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A-WEB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ODA사업비(민간경상보조사업)로 총 219억6800만원을 지원했다. 88.7%를 부담한 것이다.

반면 나머지 106개국 회원국은 25억 400만원, 총 11.3%를 지원하는데 그쳤다.

○ 최근 5년간 외교부 대상 사이버 공격 중국發 최다, 하루평균 16건

외교부를 상대로 한 중국發 사이버 공격 시도가 최근 5년간 하루평균 16건(1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미래통합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교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외교부를 상대로 총 47,008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 사이버 공격 시도 건수는 ▲2016년 8,482건, ▲2017년 14,190건, ▲2018년 9,877건, ▲2019년 8,893건, ▲2020년(7월 기준) 5,566건이었다.

○ 북이 갚아야 할 차관 1조700억원, 62차례 상환 공문에 묵묵부답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태용 의원(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북한에 빌려주고도 받지 못하

는 차관 규모가 1조 700억원에 달하지만 북한이 상환촉구에 무응답으로 일관하는데도 정부가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일부가 조태용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10월부터 2007년 5월까지 6건의 식량차관, 1건의 자재장비차관, 1건의 경공업 원자재 차관이 이루어져 8건에 대한 차관 규모는 9억3천3백만 달러였다. 이는 우리 돈 1조700억 원에 달한다.

북한은 경공업 원자재차관에 대해 2007년 12월과 2008년 1월, 2차례에 걸쳐 아연괴 240만달러(27억8천만원)를 현물로 일부 상환한 것 외에는 우리 측 상환 통지에 응하지 않고 있다.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부임 후 2년3개월 동안 강연 32회, 자문 39회 등으로 2천5백여만원 부수입 올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임춘택 원장이 부임후 2년 3개월 동안 71회의 강연과 자문 활동을 통해 수천만원의 부수입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13일(화), 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에기평원장 부임 후 강연, 자문 활동 현황」에 따르면 임춘택 원장은 2018년 6월 부임후부터 올해 9월까지 강연활동 32회를 통해 1천2백6십만원, 자문활동 39회에 걸쳐 1천3백2십만원 등 총 71회의 강연과 자문활동으로 2천5백8십만원의 강연료와 자문료를 챙겼다.

○ 최근 3년 경기도 음주운전 단속 10만여명 걸려

최근 2년 8개월 동안 경기도 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10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명을)이 6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전국 음주단속에 적발된 인원은 37만1243명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10만3435명(27.8%)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서울(4만1628명), 경남(2만7천118명) 등이 따랐다.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7745명으로 확인했다.

○ 전국 승강기 10대 중 3대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 10 대 중 3대는 15년 이상 된 노후 승강기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 (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승강기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는 총 74만여대로 이 가운데 31%인 23만여대가 설치 된 지 15년 이상인 노후 승강기였다.

용도별로 보면, 화물용 승강기가 전체 화물용 승강기 중에서 15년 이상된 노후 승강기가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소형 화물용이 43%, 에스컬레이터가 30.6%, 승객용 승강기가 29.6% 의 노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지역 승강기 노후율이 36.3%로 가장 높았고, 서울 35.5%, 경남 31.6%, 부산 31.1%, 인천과 경기가 30.7%로 뒤를 이었다.

○ 10년간 해외로 나간 작물 로열티 1,400억원

버섯, 장미, 국화 등 해외에서 수입한 종자 사용료로 매년 140억원씩 로열티를 외국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농작물 종자의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매년 140억원씩 총 1,35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로열티는 버섯이 492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고, 장미가 30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5. 2020년 10월 14일(수)

○ 신한울 1·2호기 90억원대 불량케이블 분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의원(청주서원구)은 14일(수)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2015년 북미 최대 전선업체인 제너럴 케이블(General Cable)사로부터 불량케이블을 수입해 현재 90억원 상당의 분쟁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현재 미국 제네럴 케이블에 제품 하자를 이유로 90억5000만원을 보상하라며 정식 분쟁 절차를 밟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 2014년 9월 제네럴 케이블과 고압케이블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케이블은 신한울 1·2호기에 설치될 특수 제작된 제품이었다. 미국 일리노이주와 커네티컷주에서 제조된 케이블은 선박을 통해 드럼에 감긴 상태로 국내에 들어왔다. 그러나 2015년 10월 시공을 마친 일부 케이블에서 인체 감전 방지 역할 등을 하는 '쉴드' 부분 손상이 확인됐다.

○ '중국산' 마스크·체온계 26만3000점

해외직구와 오픈마켓 등을 통해 구입한 외국상품들이 가짜인 것으로 확인되는 피해가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3년간 의류와 가방, 신발 등 '국민생활 10대 품목들'의 가짜 외국 상품으로 인한 피해가 1,305건, 7,640억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규모는 '의류'가 206건으로 1위였고, 피해액을 기준으로 '가방'이 2,768억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신발은 173건 449억원 규모, 시계도 57건 317억원으로 피해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 산재장해등급보다 받기 어려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국가유공자로, 재해부상군경과 재해부상공무원이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며, 총 11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편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장해등급은 총 14개의 등급으로 구분된다. 그런데 상이등급과 장해등급의 하한선인 7등급·14등급을 비교해 보면, 상이등급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더욱 엄격한 실정이다.

○ 게임 제작 및 배급업 시장 규모의 94.2%를 PC·모바일 게임이 차지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한국 게임산업의 취약점에 대한 분석과 대안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 한국 게임 수출액 중 PC와 모바일 게임의 비중은 각각 53.4%, 44.9%로 전체의 9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게임산업 종사자 중 PC게임이 36%, 모바일 게임이 58.7%를 기록해 전체의 94.7%를 차지하고 있다.

○ 관상용 가재가 영산강 생태계 파괴 주범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 갑, 환경노동위원회)이 10월 14일 영산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유역청별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 현황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미국가재'가 영상강에서만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생태계 교란종은 총 29종 1속으로 미국가재는 지난해에 지정되었다. 미국가재의 체색은 흰색, 붉은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며 서식환경에 대한 높은 적응력을 가지고 있어 농경지, 습지, 호수, 하천에서 모두 서식이 가능하다. 또한 새우류의 곰팡이 감염질병, 백색점바이러스의 매개로 작용하여 수중 생태계를 도태시킨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사업 DPF 장치 장착 후 사후관리 부실로 보조금만 낭비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은 10월 14일 한강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5년부터 노후 경유차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였는데 성능건사 미수검 등 사후관리 부실로 혈세만 낭비하고 대기오염은 심각해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8월 현재까지 노후 경유차량 18만대에 매연저감장치(DPF)를 부착하였다. 이에 투입된 예산은 3,866억원에 달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의2제1항은 DPF부착 차량은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성능검사를 하지 않고 운행 중인 차량이 27.9%나 된다. 또한 DPF 부착 후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20%가 성능기준에 미달하여 배출가스를 내뿜고 운행 중에 있다.

노의원은 매연저감장치 지원예산은 2015년 320억원에서 2020년 8월 현재 1,322억원으로 4배나 증가했으나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헛돈만 쓰고 있다고 지적하고 소유주가 성능 유지 확인 검사 미수검, DPF 클리닝 미실시 등 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부담금과 정밀조사 면제, 운행 제한 제외 등 기존에 부여한 혜택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 KBS1, 평일 오후 · 새벽 시간대인 C급에 87% 배정, sbs도 C급에 79.3% 배정조승래 의원 "지상파 방송의 공익 목적 잊지 말아야"

지상파 방송사들이 올해 제작된 코로나 공익광고를 대부분 평일 오후, 새벽시간대인 C급에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갑)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제출받은 '코로나 관련 공익광고 지상파 방송사 방영 현황'에 따르면, 공영방송인 KBS1은 코로나 공익광고 중 87%를 C급 시간대에 편성했고, SBS는 79.3%, MBC는 66.7%를 C급 시간대에 방영했다.

○ 산림청, 초대형 헬기 평균 7.2시간마다 고장!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헬기의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노후 헬기는 전체 보유 헬기 48대 중 27대로 5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대형헬기 6대는 평균 7.2시간마다 고장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 기종별로 살펴보면, ▲미국에서 도입한 BELL412(1대)와 BELL206-3(7대), S-64(6대) ▲프랑스산인 AS350(4대), ▲러시아산 KA-32T(26대), KA-32A(3대) 그리고 ▲국산 KUH-1FS(1대) 등 총 48대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는 27대로 BELL412 1대(32년), BELL206 7대(28~32년), AS350 2대(27년), KA-32T 17대(20~27년)이며, 산림청 보유 헬기의 5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도입한 초대형 헬기 S-64 6대의 경우 평균고장간격(M.T.B.F) 작성 기준으로 7.2시간마다 고장이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 휴가를 수당으로 받지 않도록 만든 연가저축제도,국가공무원 평균 저축일은 고작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연가 사용 부진을 해결하고 연가보상비 지출을 줄이기 위해 연가저축제도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 1인당 연가저축일은 평균 1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관련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최소 11일에서 최대 21일(6년 이상 재직)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수당으로 보상하면서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연가를 사용하기보다 연가보상비를 수령하는 관행이 자리를 잡았다. 올해의 경우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전체 국가공무원의 연가보상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으나, 지난해까지만해도 약 4000억원에 가까운 국가재정이 국가공무원 연가보상을 위해 사용됐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 2017년 10.9일, 2018년 12.3일, 2019년 12.9일로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법정 최대 연가일수 인 21일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 전년도 성과평가로 올해 A 등급 받고 수 천만 원 성과급 받은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허위의 기관 평가자료를 작성해 성과급까지 탔다는 의혹이 나왔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은 2019년 경영평가에서 A 등급을 맞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까지 했는데, 이 평가보고서 중 일부 내용이 당해 연도의 자료가 아닌 전년도 자료를 근거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김혜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은 3200만 원의 성과급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 작성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평가한 '2019년도 경영평가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실적보고서 제출은 2020년 기준 전년도, 즉 2019년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기술되어있다.

5. 2020년 10월 15일(목)

○ 사립유치원 기준소득월액 100% 이상 증가 교직원 185명, 사립 초중고의 8배

기준소득월액이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 수가 사립 초중고의 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소득월액을 부풀려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과다 지급 받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사학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학교급별 교직원 기준소득월액 변동현황'에 따르면, 기준소득월액이 100% 이상 증가한 사립유치원 교직원이 185명에 달했다. 50% 이상으로 누계하면 731명, 30% 이상 누계는 2천 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에 반해 사립초등학교 교직원의 경우 100% 이상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된 경우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중학교도 3명, 사립고등학교도 20명뿐이다. 30% 이상 변동되는 사

립초· 중·고 교직원 수를 다 합해도 232명으로 전체 교직원 수 대비 0.5~0.7%밖에 되지 않는데, 사립유치원은 30% 이상 변동된 교직원 비율이 5.2%에 이른다.

○ 대학 교원 성비위 징계 1.9배 증가

대학 교원 성비위가 4년간(2015년~2019년) 1.9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 교원 성비위 징계현황(2015~2020.7월)'에 따르면 성비위를 저지른 대학(전문대 포함) 교원 중 절반(49%) 정도가 배제징계(파면, 해임)를 받지 않아 교단에 복귀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센터의 설치율과 인력·예산도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센터는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37%(89개)의 대학에만 설치되어 있다. 또한 인권센터의 정규직 전담인력은 평균 0.4명 정도로 만성적인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으며 많은 인권센터가 겸직 또는 비정규직 인력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 부족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권센터 예산규모는 천만원 미만인 곳이 35%이며 예산의 편차도 113만원(동양대)부터 7억 8천만원(서울대)까지 천차만별이다. 2018년 교육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는 성고충 전담기구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 전담인력의 고용형태를 정규직으로 할 것, 전담기구의 운영을 위한 적정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것 등을 권고했다. 그러나 인권센터의 운영상 미비점은 아직까지 개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 조명희 의원, "MBC 사장 기본연봉 2억8천 6년째 동결!"

MBC 사장의 기본연봉은 6년째 2억 8300여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사이엔 12.3%가량 올랐고, 최근 6년 간은 동결 상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문화진흥회로부터 받은 '문화방송 임원 기본연봉 현황'에 따르면, 2015~2020년 현재 MBC 사장의 기본연봉은 2억 8345만 6000원이다. 부사장과 감사는 2억 2511만 5000원을, 이사는 1억 8633만 7000원을 받는다.

기본연봉을 12월로 단순 나누면 MBC 사장은 월평균 2362만 1333원을 받고 있다. 부사장과 감사는 1875만 5958원, 이사는 1552만 8083원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MBC 임원들의 기본연봉은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약 12.29% 올랐다. 지난 2011년 3.5% 인상된 뒤 2년간 동결됐고, 2014년 8.5% 인상됐다. MBC 사장의 경우 2010년 연봉이 2억 5251만 5000원이었다가 10년 새 3014만 1000원 올라 현재에 이르렀다.

○ 경기도 아동·노인학대 각각 4,586건, 노인학대 1,837건 최다 발생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는 가정 내 발생이 대부분이어서 장기간 학대가 이어져도 신고율이 낮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린이집·유치원·경로당 등의 집합금지명령으로 그 위험이 증가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재선, 부산 남구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아동학대와 노인학대로 2만916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8월까지 아동·노인학대가 4,798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아동·노인학대 모두 4,586건, 1,83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아동 1,750건/노인 1,041건), 인천(아동 897건/노인 362건) 순이다.

○ 전국 30층이상 건축물 4,692동 소방점검, 절반도 못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행정안전위원회)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 4,692동 중 지난 3년간 소방청의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곳은 42.7%인 2,004동에 불과하였다.

특히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1,673동으로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이 중 불과 16.4%인 275동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주시도 30층 이상 고층건출물 60동 중에 21.7%인 13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았으며, 인천시도 479개동 중 23.0%인 110개동 만이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고층건축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시 산하 위원회, '15년(2462개)에서 ' 19년(2900개) 약 20% 증가

서울시 산하에 설치된 위원회 1년간 평균 회의 개최율 4.5회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자체 산하 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을 보면,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2015년 2,462개의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2019년 2900개로 20% 가까이 증가했고, 1년간 평균 회의 개최 수도 3.8회에서 4.5회로 증가하였다.

2019년 현재 지자체 산하 위원회가 가장 많이 설치 된 곳은 경기도(4104개)였고, 서울시(2,900개), 경북(2,340개), 전남(2,309개), 경남(2,060개)순이었다.

이들 위원회는 2019년 한해 동안 평균 3.91회 회의를 진행하였다. 제주도가 5회로 가장 평균 회의 개최율이 가장 높았고, 세종(4.9회), 서울(4.5회), 경기·충북(4.3회)이 뒤를 이었다.

○ 재무상태 안 좋은 한수원, 5대발전사 2030년까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에 27조원 쏟아부어

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으로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한국수력원자력과 남부발전 등 5대발전사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총 27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비용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할 계획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출받은 한수원과 5대 발전사(남동발전·중부발전·서부발전·남부발전·동서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계획' 자료에 따르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이들 기관이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용량 3만5,228MW(메가와트)를 구축하기 위해 투자하는 비용은 26조6,690억원에 달했다. 이는 설비용량으로 봤을 때 1,000MW짜리 원전 35기와 맞먹는 규모이고, 투자비용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가 전체 R&D예산(27조 200억원)에 버금가는 액수이다.

설비 투자비용을 기관별로 살펴보면 한수원이 7조43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부발전 6조2,499억원, 동서발전 4조5,769억원, 남동발전 3조9,202억원, 중부발전 2조9,395억원, 서부발전 1조9,387억원 순이다. 동 기간 신규로 건설하는 신재생발전소의 설비용량은 태양광이 가장 크고, 투자금액은 풍력발전소 건설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산사태 피해면적 지난 8년 간 합친 것보다 많아... 축구장 1,880개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는 총 6,175건, 면적은 1,343ha, 축구장 1,880개 면적이며, 9명이 사망하고 복구액만 3,31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지난 8년 동안 발생한 산사태 피해면적(1,233ha)을 다 합친 것보다 많아 앞으로 예견된 기상이변에 적극 대응해야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올 여름 발생한 산사태 총 건수(6,175건) 중 92%(5,677건)가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닌 곳에서 발생했다.

산사태취약지역은 현재 26,238개소이며, 이중 20,147개소, 즉 77%가 사방사업 등이 예방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것을 고려할 때 산사태취약지역이 제대로 지정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6. 2020년 10월 16일(금)

○ 최대 1억 '동포 장학금'..아는 사람만 타간 그들만의 공짜돈

정부가 재외동포 자녀들을 국내로 초청해 매달 90만원씩 지급하는 '재외동포 초청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는 학비가 연간 수천만원에 이르는 사립학교 출신들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장학금 제도를 재외동포들에게 널리 알려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전체 재외공관의 3분의 1은 이 같은 제도 자체를 홈페이지에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태규(국민의당) 의원이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재외동포 초청 장학금' 대상자로 선발돼 국내에서 학사 과정을 밟은 264명 가운데는 학비가 비싼 해외 소재 사립 고등학교와 국제학교 출신 등이 대거 포함됐다. 장학금 대상자가 졸업한 미국의 A고교의 경우 연간 학비가 2500만원 전후였다. 또 학기 당 700만원을 넘는 중국 상하이의 B고교를 비롯해 학비가 비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자카르타 등지의 국제학교 출신들도 많았다.

'재외동포 초청장학금'은 우리 정부가 매년 40억원 안팎의 예산을 들여 재외동포 학생 100명에게 월 90만원의 생활비와 별도의 항공료, 어학연수비, 보험료 등을 제공하고 국내에서 학사 및 석·박사 학위 과정을 밟도록 하는 제도다. 이태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 179곳 가운데 62곳(34.6%)은 작년에 이 장학금 제도 자체를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혜택이 공지되지 않은 62개 공관이 관할하는 한인 규모는 총 116만명에 이른다.

○ 손상돼 폐기된 동전 5년간 2억개 118억원, 화폐는 32억장 21조5천억 규모

한국은행이 서일준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화폐손상으로 인한 폐기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1조5천억원 어치 화폐가 손상으로 인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수로 따지면 31억8천만장이다. 또 이 폐기된 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한 비용만 3,545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전의 경우 5년간 총 118억원이 폐기되었다. 개수로 따지면 2억3백만개이다.

은행은 화재 등으로 화폐가 남아 있는 면적이 3/4 이상이면 액면 금액의 전액을, 2/5이상부터 3/4 미만이면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한국은행이 서 의원에게 제출한 '화폐손상으로 인한 교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화폐손상으로 인한 교환액이 총 13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만 벌써 25억 2천4백만원 상당 손상화폐가 교환됐고 계속 증가 중이다.

○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 건수 총 118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 더불어민주당)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운전면허시험 응시자 부정행위 적발 건수는 총 118건이었다.

적발 건수는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했는데, 2016년 20건, 2017년 25건, 2018년 25건, 2019년 33건으로 4년 사이 65% 증가했다. 올해 1~8월 부정행위로 걸린 사람은 15명이었다.

부정행위별로 보면 학과 필기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57건(48.3%)으로 가장 많았다. 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제를 검색하는가 하면, 지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문제를 풀려고 시도한 응시자도 있었다. 이어 교재 및 커닝페이퍼 이용 29건(24.6%), 대리응시 27건(22.9%), 주행시험 중 지인 도움이 5건(4.2%) 적발됐다.

○ 농민 숫자 감소하는데 농협중앙회 전체 직원 중 30%가 억대 연봉자에 성과급 잔치까지

우리나라 농가 인구는 1980년 1,082만 명에서 작년 기준 225만 명으로 무려 5분의 1로 감소했으며 회원조합 숫자도 1,485개에서 1,118개로 367개 조합이 감소했다. 동 기간에 농협 임직원 숫자는 3만 7,511명에서 10만4,466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농협중앙회 직원도 2만명을 돌파했다.

이처럼 농가 인구의 감소와 계속된 농가부채의 증가, 코로나19와 태풍 피해 등으로 농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중앙회 임직원들은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규직 전체인원 2,023명 중 연봉 1억원 이상 직원이 29.4%에 해당하는 7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인건비 중 36.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5년 새 담보-신용 비율 7대3에서 8대2로... 中企에게는 더욱 높아만 가는 은행 문턱

금융 혁신과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조 속에서 시중은행의 기업대출도 올 상반기에만 1천조 원(누적 기준)을 돌파하고,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대출 비중도 2019년 말 80%를 넘어섰지만, 막상 중소기업 대출의 질을 들여다보면 은행 문턱은 오히려 더욱 높아만 가는 실정이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시중 은행의 2015년 이후 기업 대출 현황을 파악한 결과,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 비중은 한 해도 빠지 않고 계속 줄어, 2015년 30%대였던 비중이 2020년 6월 말 기준 20%대로 떨어졌다. 반면 이와 대조적으로 담보대출 비중은 50%대에서 60%대로 올라, “비올 때 우산 뺏기”,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은 비판을 야기했던 담보 위주의 대출 관행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코이카, 해외봉사단 중도포기 매년 늘어 혈세 낭비- 최근 5년간 중도 귀국자 492명에 달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외교통일위원회/재선)이 코이카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중도귀국자가 2016년 100명에서 작년에는 144명으로 꾸준이 늘고 있으며, 중도귀국률 또한 2016년 4.8%, 2017년 5.6%, 2018년 6.1%, 2019년 6.5%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지하철역 39%, 비상시 위험 노출

서울지하철이 화재·폭발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서울시민의 안전을 제대로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국회의원(의정부시을)은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에게 비상대피시간 기준이 마련된 지 12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개선되지 못한 것에 대해 최악의 재난상황을 감안해 안전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지하철 비상대피시간 초과 역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280개 역 중에서 38.6%인 108개 역이 비상대피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청년 신용불량자 1만 시대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은 뭐하나

신용회복위원회와 한국장학재단 간 채무조정이 불가능해 청년세대 신용회복에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6개월 이상 이자를 연체한 연체자가 올 6월말 기준 47,873명으로, 2015년 대비 73%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동수 의원은 “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대출과 취업 시 상환 대출로 나뉘는데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연체자가 전체 연체자의 94.6%인 45,311명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상환 학자금은 취업 시 상환 대출과 다르게 소득활동이 없어도 상환기간이 도래해 연체자 비율이 높다”고 꼬집었다.

○ NH투자증권 ‘옵티머스’ 운용사 심사 면제해줬다

옵티머스 발 사모펀드 사기 사건에 가장 큰 피해 규모를 기록한 NH투자증권이 지난 7월 사모펀드 상품 검증 과정에서 도출된 법률검토 의견을 옵티머스 측의 고문 변호사인 윤석호에게 일임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한 자체 운용사 심사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판매사의 부실 검증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만희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이 NH투자증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자산운용사에 대해 자사가 운용하는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에 마련된 NH투자증권의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 공통 심사기준」은 금융상품 관련 거래상대방의 거래 여부를 심사하고 부적격 거래상대방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휴 리스크를 최소화하기위해 마련됐으며 운용사의 재무제표, 회사 안정성, 회사 성장성, 지원 인력, 제재사항 그리고 계획으로 구성된 배점표 형식의 기준이다.

이만희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지난해 옵티머스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상품 검증 과정에서 내부 기준에 따른 운용사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 NH투자증권, 2017년부터 69개 상품 5,479억원의 부실상품 취급

NH투자증권의 국정감사를 앞둔 16일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속초・인제・고성・양양)은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사태 이전에도 8개 운용사의 부실상품을 취급해 왔고 여전히 55개 상품은 환매중단 중인 것으로 드러났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은 2017년 이후 라임과 옵티머스를 비롯한 9개 운영사의 69개 상품, 판매기준으로 총 5,958억원의 부실상품을 취급해왔다. 이로 인한 환매중단 잔고는 5,479억원에 달했다..

이 의원은 “옵티머스 환매중단이 발생하기 전부터 이렇게 많은 부실상품을 운영해왔고 라임사태까지 겪고도 옵티머스의 부실상품을 제대로된 검증 없이 판매해 화를 키웠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을 되풀이 하지 않고 최고의 전문 투자증권회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NH투자증권 임직원 전체의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효율성,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국감 개선 제안

▣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철저한 점검으로 중복국감을 막아라
▣ 외교통일위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실효성 있게 하라 - 혈세낭비 · 비효율
▣ 국정감사법대로 30일 국감을 시행하고, 전반10일에 현장시찰과 증인신문을 하자.

○ 제21대 국회 1차년도 국리민복상 평가 등

이번 2020년도 국정감사 평가는 2020년도 종합 평가 및 국리민복상 시상식에서 할 예정임

≪참고 : 자료 21년간 국정감사 총 감사일수와 대상기관수 현황≫

국회	대통령	연도	국회의원 정수 (감사위원)	상임 위 갯수	총 감사 일수	대상 기관 (실시)	현장 시찰 횟수
제15대 국회 (1996.05.30.~2000.05.29.)	김대중	1999	299 (298)	16	183	352	18
제16대 국회 (2000.05.30.~2004.05.29.)	김대중	2000	273 (272)	16	188	357 (355)	23
	김대중	2001	273 (269)	16	187	402 (392)	31
대선	김대중	2002	273 (271)	17	159	365	17
	노무현	2003	273 (271)	17	170	399	24
제17대 국회 (2004.05.30.~2008.05.29.)	노무현	2004	299 (298)	17	190	457 (356)	31
	노무현	2005	299 (295)	17	174	461	16
	노무현	2006	299 (296)	17	180	510	40
대선	노무현	2007	299 (298)	17	160	488	20
제18대 국회 (2008.05.30.~2012.05.29.)	이명박	2008	299 (298)	16	168	478	32
	이명박	2009	299 (289)	16	168	478	25
	이명박	2010	299 (271)	16	166	514	26
	이명박	2011	299 (295)	16	157	563 (556)	30
제19대 국회 / 대선 (2012.05.30.~2016.05.29.)	이명박	2012	300 (299)	16	163	559	27
	박근혜	2013	300 (297)	16	169	628	24
	박근혜	2014	300	16	163	672	11
	박근혜	2015	300	16	161	708	21
제20대 국회 (2016.05.30.~2020.05.29.)	박근혜	2016	300	16	161	691	22
대선	문재인	2017	300	16	163	701	27
	문재인	2018	300 (297)	17	168	753	24
	문재인	2019	300 (296)	17	159	788	20
제20대 국회 (2020.05.30.~2024.05.29.)	**문재인**	**2020**	**300 (299)**	**17**	**137**	**705**	**8 (계획)**

* **원 자료 출처** : 국회사무처 연도별 국정감사 및 조사 통계자료집 및 국회사무처 국정감사 수첩 등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였음(계획과 시행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음, 현장시찰은 국정감사와 병행을 하는 경우도 있음, 예컨대 같은 날 반이 나누어져 시행되는 경우나, 오전 또는 오후에 시찰을 하고 국감 진행, 정보위 포함)

2020년도 국감 전반전 간이평가 보도자료는 홈페이지에도 게시되어 있음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홈페이지(www.goodlaw.org)